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514-01

문화예술분야 세제 개선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문화예술분야 세제 개선 방안 연구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귀중

본 보고서를 『문화예술분야 세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3년 6월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성규

연구진

책임연구원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공동연구원

이지영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금영 한미회계법인 컨설턴트

남보라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김경이 한국예술종합학교 협동과정

목 차

I 서론	1
II 현행 문화예술 관련 세제	4
1. 개요	4
2. 기초적인 세법의 이해	5
가. 법인세	5
나. 소득세	7
3. 공급자 측면의 현행 세제	14
가. 비영리문화예술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4
나. 공공박물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18
다.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면제	21
라. 박물관, 미술관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25
마. 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27
바.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등에 대한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부동산 증과세 배제	28
사. 평생교육시설 및 문화예술단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33
아.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36
자.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관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39
차.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41
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44
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등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47
4. 수요자 측면의 현행 세제	51
가. 기부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또는 필요경비산입)	51
나. 문화접대비 추가 손금 산입	63
다. 문화예술사업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68
라.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비과세	73
마. 기업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비 인정범위 상향 조정	75
III 산업연관분석의 활용	77
1. 산업연관분석의 의의	77
2. 산업연관표의 목적	78
3.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78
가. 생산유발계수	78
나. 부가가치유발계수	79
4. 산업연관표의 결정	80
IV 문화예술분야 세제 개선 요구	82
1.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	82
가. 도입 배경	82
나. 도입 목적	82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82
라. 세제 개선 사항	83
마. 도입 효과	83
바. 제도의 한계	85
2. 문화예술기업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	86
가. 도입 배경	86
나. 도입 목적	86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86
라. 세제 개선 사항	87
마. 도입 효과	87
바. 제도의 한계	88
3. 문화예술기업의 지식기반산업에 포함	89
가. 도입 배경	89
나. 도입 목적	89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89
라. 세제 개선 사항	90
마. 도입 효과	91
바. 제도의 한계	92
4. 개인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93
가. 도입 배경	93
나. 도입 목적	93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94
라. 세제 개선 사항	95
마. 도입 효과	95
바. 제도의 한계	99
5. 법인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100
가. 도입 배경	100
나. 도입 목적	100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102
라. 세제 개선 사항	103
마. 도입 효과	103
바. 제도의 한계	107
6. 문화비 지출 특별공제 도입	108
가. 도입 배경	108
나. 도입 목적	108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108
라. 세제 개선 사항	109
마. 도입 효과	110
바. 제도의 한계	115
7. 미술품 구입 시 손비인정 범위 확대	116
가. 도입 배경	116
나. 도입 목적	117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117

라. 세제 개선 사항	118
마. 조사 방법	119
바. 도입 효과	123
사. 제도의 한계	126
8.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도입	128
가. 도입 배경	128
나. 도입 목적	128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129
라. 세제 개선 사항	131
마. 조사 방법	131
바. 도입 효과	133
사. 제도의 한계	135

표 목 차

[표 2-1] 문화예술 관련 세제	4
[표 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적립 가능한 단체	7
[표 2-3] 소득의 종류	12
[표 2-4] 2010년 이후 과세표준별 적용 세율	13
[표 2-5] 수도권 내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감면업종 및 감면율	41
[표 2-6] 수도권 외의 지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감면업종 및 감면율	41
[표 2-7]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분야 관련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52
[표 2-8] 소득세법상 문화예술분야 관련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53
[표 2-9]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분야 관련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적용률	63
[표 2-10] 일반집대비의 한도액 적용률	65
[표 3-1] 산업연관표 중분류의 계수(2009년 경상표 기준)	81
[표 4-1]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현황('12.1월 현재)	83
[표 4-2]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 추이	84
[표 4-3]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에 따른 분야별 효과 추이 ...	85
[표 4-4] 문화예술기업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에 따른 분야별 효과 추이	88
[표 4-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비율	90
[표 4-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업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함에 따른 효과 추이	92
[표 4-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업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함에 따른 분야별 효과 추이	92
[표 4-8] 최근 5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모집 현황	93
[표 4-9] 개인 기부에 대한 조사의 설계	96
[표 4-10] 세액공제 비율 별 예상 기부금액 증가율	97
[표 4-11] 개인기부금의 30% 세액공제 시 기부추정액과 도입 효과	97
[표 4-12] 개인기부금의 30% 세액공제 시 부가적인 경제 효과	97
[표 4-13] 개인기부금의 50% 세액공제 시 기부추정액과 도입 효과	98
[표 4-14] 개인기부금의 50% 세액공제 시 부가적인 경제 효과	98
[표 4-15] 개인기부금의 100% 세액공제 시 기부추정액과 도입 효과	98
[표 4-16] 개인기부금의 100% 세액공제 시 부가적인 경제 효과	99
[표 4-17] 최근 5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모집 현황	100
[표 4-18] 문화예술 공금 부문 세제	101
[표 4-19] 문화예술 수요 부문 세제(법인)	101
[표 4-20] 법인 기부에 대한 조사의 설계	104
[표 4-21]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법인사업자의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 신고액	104
[표 4-22] 세액공제 비율 별 예상 법인 기부금액 증가율	105
[표 4-23] 법인기부금의 30% 세액공제 시 기부추정액과 도입 효과	105
[표 4-24] 법인기부금의 30% 세액공제 시 부가적인 경제 효과	105
[표 4-25] 법인기부금의 50% 세액공제 시 부가적인 도입 효과	106
[표 4-26] 법인기부금의 50% 세액공제 시 부가적인 경제 효과	106
[표 4-27] 법인기부금의 100% 세액공제 시 부가적인 도입 효과	106
[표 4-28] 법인기부금의 100% 세액공제 시 부가적인 경제 효과	107
[표 4-29]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조사의 설계	111
[표 4-30] 가구당 평균 오락문화비 항목별 지출 현황 및 예상	112

[표 4-31] 전국 연령별 추계가구 수	113
[표 4-32] 2010년~2012년 문화비 지출 규모	113
[표 4-33] 기존 증가율에 따른 향후 3개년도 문화비 지출 규모	113
[표 4-34]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문화비 지출 증가율	113
[표 4-35] 조사된 증가율에 따른 향후 문화비 지출 총액	114
[표 4-36]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액	114
[표 4-37] 근로소득 실효세율	114
[표 4-38]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의 세수감소액 및 세제 도입 효과	114
[표 4-39]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의 부가적인 경제 효과	115
[표 4-40] 국내 경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미술품	116
[표 4-41] 미술은행의 3년간 구입 현황	116
[표 4-42] 미술거래 관련 국내 세제 현황(국세 기준)	118
[표 4-43] 기업의 미술품 구입 손비 인정 범위 확대의 효과 및 세수감소액 추정 과정	120
[표 4-44] 설문조사 기업의 매출액 및 미술품 구입액	121
[표 4-45] 흑자법인과 적자법인 구분	121
[표 4-46] 미술품 구입 추정액과 비중	122
[표 4-47]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 동안 매 년도에 손금산입되는 금액 비교	123
[표 4-48] 법인의 미술품 구입 시 손비 인정 범위를 1천만 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세수감소효과 분석	123
[표 4-49] 법인의 미술품 구입 시 손비 인정 범위를 1천만 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세수감소액과 정책 효과 ..	124
[표 4-50] 법인의 미술품 구입 시 손비 인정 범위를 1천만 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정책 효과(향후 3년)	125
[표 4-51] 법인의 미술품 구입 시 손비 인정 범위를 1천만 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효과 추이	125
[표 4-52] 법인의 미술품 구입 시 손비 인정 범위를 1천만 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분야별 효과 추이	126
[표 4-53] 문화예술 관련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 및 세수감소액 추정 과정	132
[표 4-54]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문화예술 활용 교육훈련비 추정액 및 효과	133
[표 4-55]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제도의 정책적 효과	134
[표 4-56]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효과 추이	134
[표 4-57]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도입 따른 분야별 효과 추이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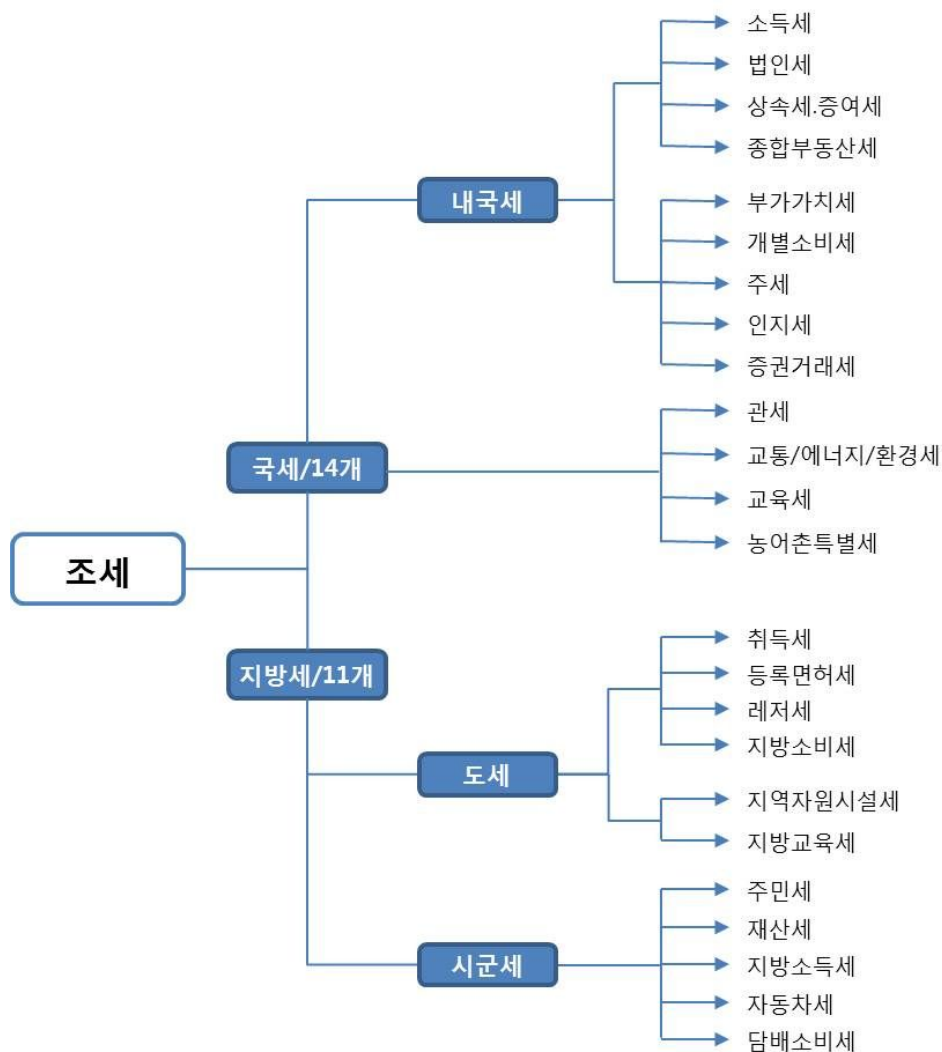
그림 목 차

[그림 1-1] 조세 체계	1
[그림 2-1] 법인세 납부 세액 계산	5
[그림 2-2] 소득의 구분	9
[그림 2-3] 소득세의 계산 절차	10
[그림 2-4] 소득세액 계산의 구조	11
[그림 4-1] 문화비 지출로 인한 선순환	108

I. 서론

-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정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할 수 있음

[그림 1-1] 조세 체계¹⁾



- 조세정책이라 함은 조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조세를 부과한다든가 감면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의 재정정책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체계 : 조세제도

책을 말함. 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세정책은 전형적인 간접지원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물론 문화예술에 대한 조세정책은 전체 문화정책 중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조세는 예술단체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조세정책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수요 또는 기부가 변동될 수 있어 예술단체에게는 민감한 사항일 수 있음

- 예술관련 조세에 대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음

- 첫째는 현행 세제에 대한 정리

지금까지 예술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별 분야 또는 개별 세제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이에 따라 예술 관련 세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현재 예술과 관련된 세제를 자세하게 정리하고자 함

하나의 세제가 모든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함. 따라서 현행 세제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와 수요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세제로 구분할 것이며, 조세정책으로 인한 수혜 가능 단체를 명기하려고 함

- 둘째는 새정부의 문화정책 관련 조세에 대한 연구

박근혜정부는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이라며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함께 문화융성을 3대 국정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문화예산 2%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기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지만 이 중에는 조세정책도 포함됨. 새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세제 개선안 8가지를 제시한 바 있음. 각각의 필요성과 의미도 중요하지만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수감소가 수반되며 이에 따라 세수감소액 이상의 계량적/비계량적 효과를 측정해야만 함.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8개의 세제 개선안을 중심으로 각각의 효과를 분석할 것이며, 제도 도입을 위해 각 제도의 의미와 가치 및 효과를 정리할 것임

- 이러한 연구 목적을 갖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서를 구성하고자 함

- 우선 제2장에서는 현행 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룸. 기본적으로는 예술 관련 세제에 대한 기존 정책과 보고서를 조사하여 예술 관련 세제의 전체 목록을 만들고 이를 공급자에 대한 세제와 수요자에 대한 세제로 구분할 것임. 다음으로는 최근 개정된 세법 조문을 정리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각각의 세제의 수혜대상과 의미를 도출함. 또한 비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세제를 설명하면서 전문적인 수준의 의견을 첨부하여 향후 조세정책 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제3장에서는 최종수요가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 부문별로 알 수 있는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8개의 세제 개선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계수를 결정할 것임

- 제4장에서는 제시된 8개의 개선안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효과를 분석함. 8개의 개선안에 대하여 각각에 맞게 다음과 같은 조사방법을 사용하고자 함
 -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 : 전문예술법인 중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납부하고 있는 법인세 파악
 - 문화예술기업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 : 문화예술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의 리스트를 파악하고 해당업체의 재무제표를 조사하여 부동산 취득 내용 파악
 - 문화예술기업의 지식기반산업에 포함 : 문화예술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의 리스트를 파악하고 해당업체의 재무제표를 조사하여 당기순이익 및 법인세 규모 추정
 - 개인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부금 증가액 추정
 - 법인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부금 증가액 추정
 - 문화비 지출 특별공제 도입 :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비 지출 증가액 추정
 - 미술품 구입 시 손비인정 범위 확대 : 기존 연구보고서 및 통계자료 정리
 -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도입 : 기존 연구보고서 및 통계자료 정리
- 이를 토대로 산출한 1차적인 효과금액을 기준으로 세수감소액을 계산하고,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에 따른 각 계수를 적용하여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의 계량적 효과를 산출하여 정리하도록 함

II. 현행 문화예술 관련 세제

1. 개요

○ 문화예술 관련 세제는 문화예술단체가 부담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있으며, 문화예술단체 이해관계자의 세금에 혜택을 부여하여 문화예술단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단체와 관련된 세제를 공급자 측면,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세제를 수요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함.

○ 현행 문화예술 관련 세제를 다음과 같이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1] 문화예술 관련 세제

	주요 내용	관련 세법
문화예술 공급자	1 비영리문화예술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 공공박물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문화재 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박물관, 미술관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5 박물관, 미술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6 대도시내 법인 문화예술기업의 지방세 3배 중과세 배제	지방세법
	7 문화예술단체의 고유업무 사용목적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8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관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11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2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등의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문화예술 수요자	1 기부금 손금 산입, 소득공제(필요경비산입)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 문화접대비 추가 손금 산입	법인세법
	3 문화예술사업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4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5 기업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비 인정범위 상향 조정	법인세법

2. 기초적인 세법의 이해

- 문화예술 관련 세제는 예술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소득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로 인해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소득세법, 법인의 소득과 관련한 법인세법이 다수의 세제에 적용됨. 따라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가. 법인세

1) 법인세의 개요

- 법인세는 소득세와 더불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목임.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세금 계산 구조를 달리하고 있는 것임. 법인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실체에 대하여 인격체를 부여한 것임. 따라서 법인은 법인 등록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며 그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임
- 법인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게 되고 청산등기에 의하여 이것이 소멸함. 따라서 법인세에서는 법인격을 취득한 후 가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간구분의 개념에 의해 산정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청산 시 발생하는 청산소득까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법인세가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주민세)도 과세됨. 법인세 계산 시에는 항상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10%만큼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이러한 법인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됨

[그림 2-1] 법인세 납부 세액 계산

계산절차	비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회사에서 작성한 손익계산서 기준
(+) 익금산입·손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차가감 소득 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세무상 이익 개념
(-) 이월결손금	전기까지 발생한 세무상 손실누적액 중 미공제되고 남은 잔액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1억 이하: 13%, 1억 초과: 25%
산출세액	
(-) 세액 감면 및 공제	
(+) 가산세	
가감계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중간예납 등
(+)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2)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계산

- 문화예술 관련 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익사업이 전혀 없이 고유목적만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당연히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지만, 수익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한다면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는 영리법인과 공평과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며, 공정한 경쟁관계를 저해하게 됨.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위장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임. 이런 이유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이라 할지라도 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영리법인과 동일하지만 수익사업으로 생긴 재원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같은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인에서 고유목적과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를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김

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계산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제외되는 사업을 나열하고 있는 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등임. 따라서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사업은 모두 수익사업에 포함됨. 또한 예금이자, 배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등도 수익사업에 포함이 됨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향후에 고유목적에 사용될 부분을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임. 그렇다고 법인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인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100%,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50%를 합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인정하여 줌. 단, 이 한도금액을 세금계산 시 자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이 한도금액 이상을 결산할 때 재무제표에 반영시켜주어야 하는 것임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으로 1999년도부터는 지방문화원과 예술의전당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2001년 7월 31일 재정경제부령으로 다음의 단체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었음

[표 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적립 가능한 단체

법인명	문화관광부지정번호
(재)국립발레단	제2001-2호
(재)국립오페라단	제2001-3호
(재)국립합창단	제2001-4호
(재)정동극장	제2001-5호
(재)서울예술단	제2001-6호
(재)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제200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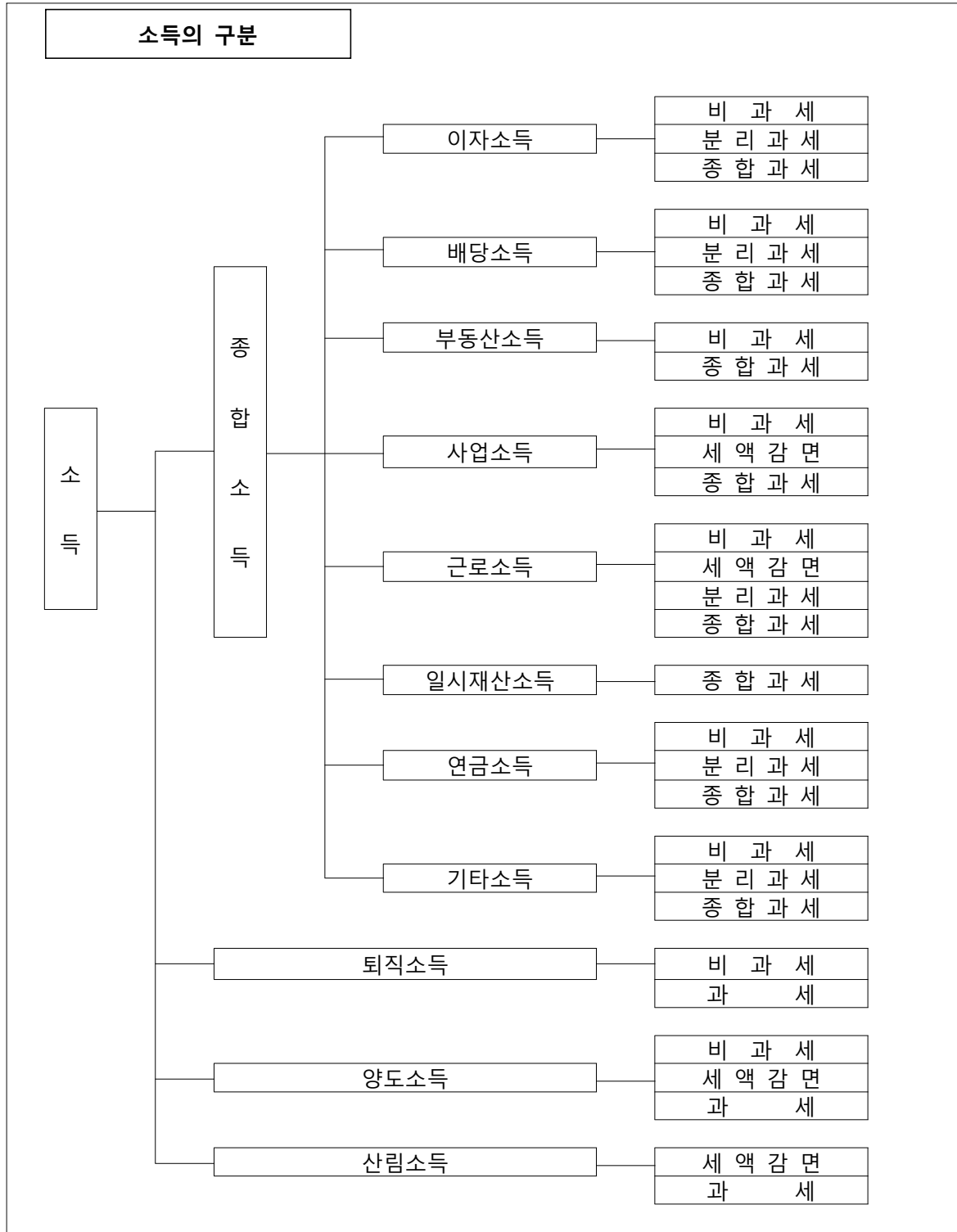
나. 소득세

1) 소득세의 개요

-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다양한 소득을 얻고 있으며 소득은 가장 기본적인 세원(稅源)임.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음. 퇴직금을 받거나 재산 양도를 통해 일시적인 소득이 생기기도 함. 또 부수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넣었더니 이자소득이 발생하기도 하고, 주식투자를 하다 보니 배당소득이 생기기도 함.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은 대부분 과세의 대상이 됨. 법인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모아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개인은 각각의 종류별 소득을 계산한 후 이를 합하거나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소득세는 자연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의 11가지로 나누고 있음.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자연인에게 종속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함. 그리하여 소득세법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과세라고 함. 다만, 일부의 경우는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하여 종합과세하지 않고 있음. 일부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되며, 원천적으로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분류과세됨
- 문화예술과 관련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면 소득세 중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관련된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소득세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본 후 사업소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함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구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 2-2] 소득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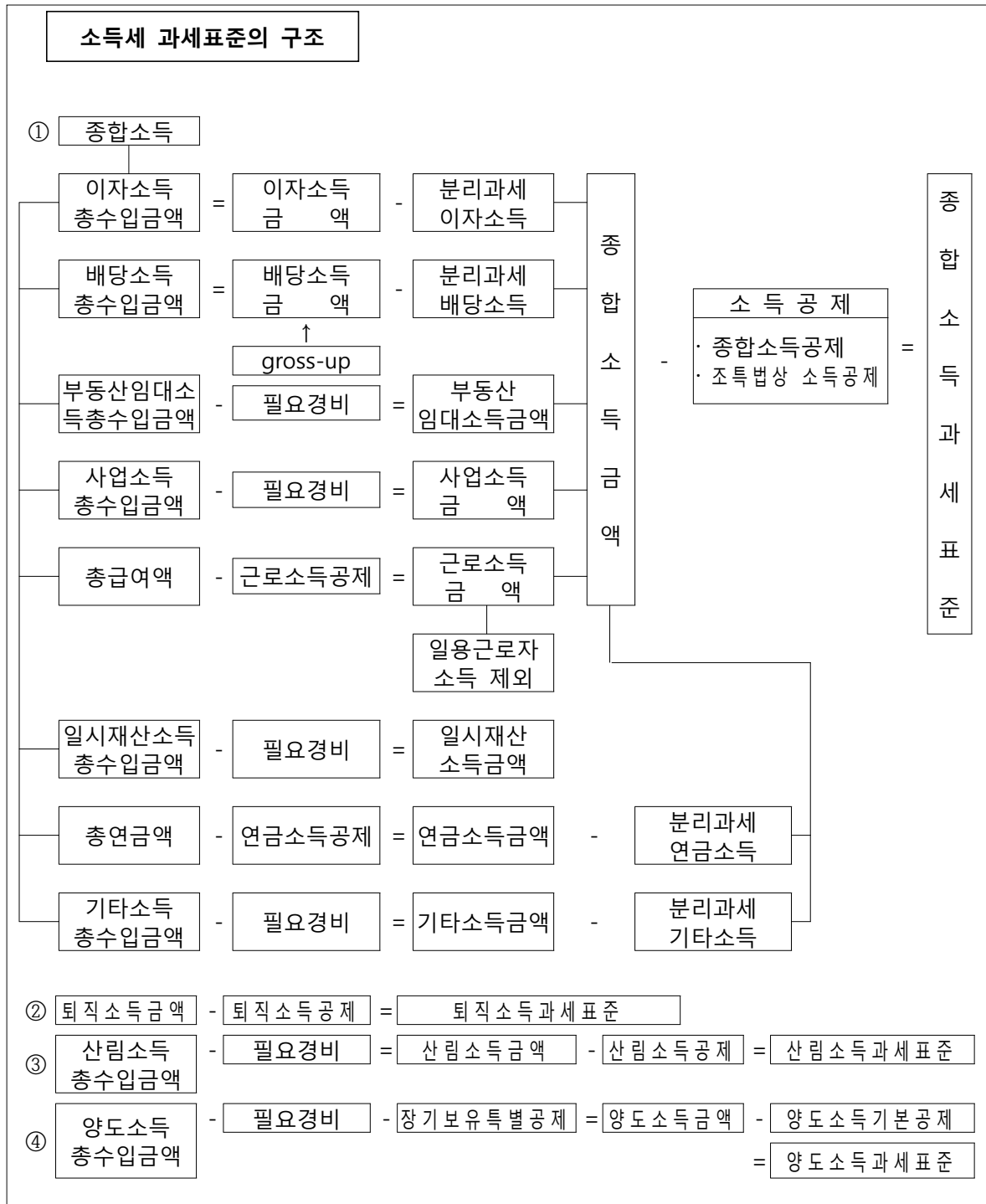
2) 납세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거주자와 그 이외의

비거주자임. 거주자는 무제한납세의무자이고, 비거주자는 제한납세의무자임. 즉,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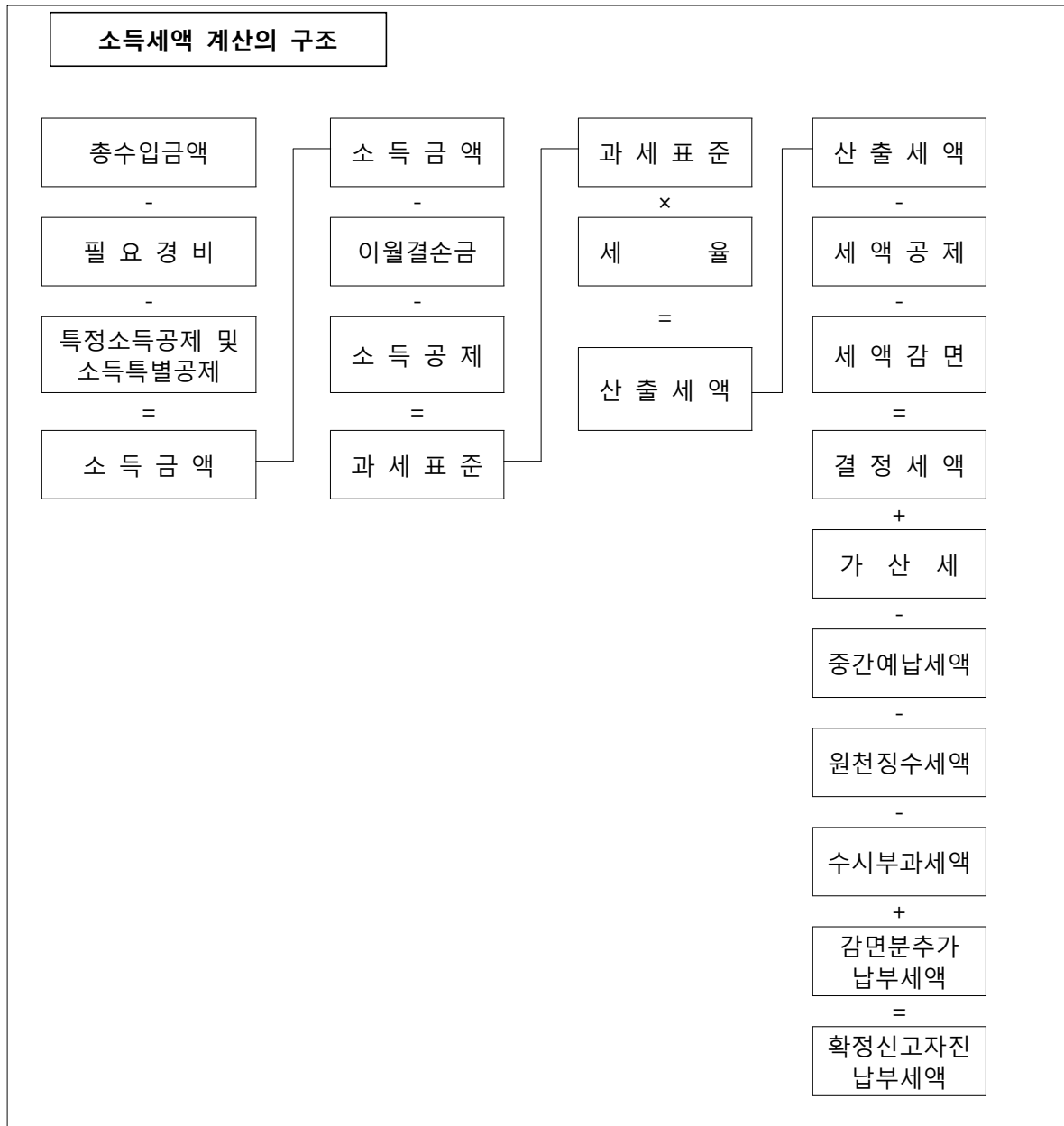
3) 소득세의 계산 절차

[그림 2-3] 소득세의 계산 절차



- 소득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소득 종류별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음.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등을 더하거나 빼주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됨.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음

[그림 2-4] 소득세액 계산의 구조



4) 소득의 종류

[표 2-3]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		범위	소득금액계산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이자, 채권이자와 할인액, 투자신탁이익, 보험차익 등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	총수입금액+배당가산액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사업소득	제조, 건설, 도소매,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형태로 받는 것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	상금, 복권당첨금, 사례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원고료강의료 등)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요된 필요 경비 또는 수입금액의 80%)
퇴직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일시금	총수입금액-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골프회원권, 콘도이용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

5) 소득세의 기본 원리

- 1년 단위 과세 : 매년 1월1일 ~12월 31일(법인세와 차이)
- 개인별 과세 (예외 : 공동사업 합산과세)
- 납세지 : 주소지 기준
- 중간예납 : 매년 11월(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의 일부)
- 분납가능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자율신고 납부 : 미신고, 미납부 시 가산세
- 종합과세 :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단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 분리과세 :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인정 (금융기관 이자소득 등)
- 선택적 분리과세 : 연간 3백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6) 세율 : 누진세율

[표 2-4] 2010년 이후 과세표준별 적용 세율

과세 표준	적용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백만 원 초과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백만 원 초과분의 24%
8,800만원 초과	1,590만원+8천8백만 원 초과분의 33%

3. 공급자 측면의 현행 세제

가. 비영리문화예술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대상 및 단체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 해당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2) 세제의 개요

- 법인세는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사항(익금, 손금)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됨. 익금조정사항은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산출세액이 증가하게 되고, 손금조정사항은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산출세액이 감소하게 됨
-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비영리법인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음

3) 혜택(수혜 내용)

-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소득별로 아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특정소득금액의 100%
 -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 80%)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아래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100%까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지방문화원
 - 예술의 전당
 -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여기에 이자 상당액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하는 경우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 손금산입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관련 세법 조문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5) 조문 내용 및 해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2011.12.31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2011.12.31 개정)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2010.12.30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10.12.30 개정)

(중략)

-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0.12.30개정)
1. 해산한 경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2010.12.30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2010.12.30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2010.12.30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2010.12.30 개정)

⑤ 제4항 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하락)

○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특정소득금액의 100% 및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또는 80%)를 한도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하며, 문화예술 관련 단체 중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는 여기에 해당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함

○ 그러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고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3.01.01 개정)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2008.12.26 개정)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2008.12.26 개정)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008.12.26 개정)
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2011.12.31 신설)

○ 박물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모든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100%까지 손금산입 가능하며(2014년 말 일몰)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게 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7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2005.02.19 법령개정)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2005.02.19 법령개정)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2008.02.29 직제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예술의 전당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100%까지 손금산입 가능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009.08.28 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대상문화예술단체고시

법인명 /대표자 /문화관광부지정번호

국립발레단 /최태지 /제2001-2호

국립오페라단 /박수길 /제2001-3호

국립합창단 /염진섭 /제2001-4호

정동극장 /박형식 /제2001-5호

서울예술단 /신선희 /제2001-6호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이영조 /제2001-7호

- 또한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대상문화예술단체로 고시된 6개 단체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100%까지 손금산입 가능함

나. 공공박물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1) 대상 및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세제의 개요

-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해서 10%~50%의 세율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만, 일정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목적 또는 사회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3) 혜택(수혜 내용)

- 공공박물관이 유증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비과세하여,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됨. 그러나 공공박물관에 대하여 정확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어디까지 이 조항이 적용될지 애매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4) 관련 세법 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조문 내용 및 해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및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2010.01.01 개정)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0.01.01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2010.01.01 개정)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2007.12.31 개정)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2010.06.08 개정)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2010.01.01 개정)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2010.01.01 개정)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010.06.08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1998.12.28 신설)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2010.01.01 개정)

- 상속세법 제12조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2013.02.15 개정)
1. 지방자치단체조합(1998.12.31 신설)
 2. 삭제(1999.12.31)
 3.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2008.02.29 직제개정)(하략)

-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없음

-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상속세가 비

과세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령에서 공공박물관에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함

다.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면제

1) 대상 및 단체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재자료 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자

① 문화재자료 등

-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 「문화재보호법」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

② 박물관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

○ 박물관자료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상속인이 박물관 등을 설립하여 전시·보존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2) 세제의 개요

○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모든 권리가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는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려워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가 계속하여 보존 및 활용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문화재자료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대하여 징수를 유예해주고 있음. 또한 준용규정을 두어 증여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3) 혜택(수혜 내용)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징수유예되는 문화재자료 등의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음. 증여세의 경우에도 동일함

$$\text{징수유예 상속(증여)세액} = \text{상속(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징수유예대상문화재자료등의재산가액}}{\text{총상속(증여)재산가액}}$$

○ 다만, 상속(증여)세를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한편, 문화재자료 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상속(증여)받은 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아래의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것은 상속세를 징수유예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증여)세를 징수하여야 함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4) 관련 세법 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5조 [준용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6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7조 [준용규정]

5) 조문 내용 및 해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2010.01.01 제목개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2010.01.01 개정)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0.02.04 개정)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자료"라 한다)(2010.01.01 개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71조를 준용한다.(2010.01.01 개정)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0.01.01 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보관 중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유예해 주고 있으며, 문화재자료 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함
-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공익법인등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다만, 박물관 자료나 미술관 자료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등록할 때 제출하고 이후 변경이나 추가하는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5조 [준용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5조 [준용규정]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2010.01.01 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보관 중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유예해 주고 있음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6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6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법 제7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996.12.31 개정)
- ② 법 제7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1996.12.31 개정)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1996.12.31 개정)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 ③ 법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로 한다.(1996.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7조 [준용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7조 [준용규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76조 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2003.12.30 개정)

-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징수유예되는 문화재자료 등의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징수 유예하고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라. 박물관, 미술관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1) 대상 및 단체

-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등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2) 세제의 개요

- 관세법에서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 육성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세법 제90조에서는 학술의 진흥 및 교육, 문화,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당해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음

3) 혜택(수혜 내용)

-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80%가 감면됨. 이처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3년의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함

4) 관련 세법 조문

-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5) 조문 내용 및 해설

-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박물관 등의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감면됨

●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2004.3.30, 2010.3.30>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부분품(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원재료 및 견품
- (중략)
- ⑤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2.14, 2009.12.31>

○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이며, 이러한 학술연구용품에 대해서는 80%의 관세를 감면함

마. 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대상 및 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2) 세제의 개요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보석, 귀금속제품, 고가의 사진기·시계·용단·가방·모피·가구, 휘발유 등 유류, 자동차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됨. 이 중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3) 혜택(수혜 내용)

- 학교, 어린이집, 과학관, 박물관, 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그러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4) 관련 세법 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5) 조문 내용 및 해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2011.12.31 단서신설)
6.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2013.01.23 개정)

- 학교, 어린이집, 과학관, 박물관, 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제

바.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등에 대한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부동산 중과세 배제

1) 대상 및 단체

- ①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② 법인이 ③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되 ④ 중과세 배제업종에 직접 사용하거나 법인의 사원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2) 세제의 개요

-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임. 표준세율은 부동산등의 취득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음
-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치성 재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 및 대도시내 법인신설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 중 법인의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등기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임
- 아래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3배수에서 4%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그러나,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 없이 표준세율을 적용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는 중과배제업종을 나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아래 업종이 포함되어 있음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 혜택(수혜 내용)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수에서 4%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중과세 배제업종에 직접 사용하거나 법인의 사원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함
- 예를 들어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을 100억원에 유상취득한 경우 중과세세액은 $100억 \times \{(4\%(\text{표준세율} \times 3\text{배}) - 4\%)\} = 8\text{억원}$ 이지만,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만 적용하여 $100억 \times 4\% = 4\text{억원}$ 이 됨

4) 관련 세법 조문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5) 조문 내용 및 해설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0.03.31 개정)
1. 상속으로 인한 취득(2010.12.27 개정)
 - 가. 농지: 1천분의 23(2010.03.31 개정)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2010.03.31 개정)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2010.12.27 개정)
 3. 원시취득: 1천분의 28(2010.03.31 개정)
 4. 「신택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2010.03.31 개정)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2010.12.27 신설) [부칙]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2010.12.27 개정)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2010.12.27 호변개정)
 - 가. 농지: 1천분의 30(2010.03.31 개정)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2010.03.31 개정)
- (하략)

●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0.03.31 개정)
1. 선박(2010.12.27 개정)
 -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2010.12.27 개정)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신택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 나. 소형선박(2010.12.27 개정) 1)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2010.12.27 개정)
 2. 차량(2010.03.31 개정)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2010.03.31 개정)
 - 나. 그 밖의 자동차(2010.03.31 개정)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2010.12.27 개정)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2010.12.27 개정)
 4. 항공기(2010.03.31 개정)
 -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2010.03.31 개정)
 -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2010.03.31 개정)
 5. 입목: 1천분의 20(2010.03.31 개정)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2010.03.31 개정)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2010.03.31 개정)
- ② 제1항 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2010.03.31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2010.12.27 단서개정)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010.03.31 개정)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010.03.31 개정)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2010.12.27 신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2010.12.27 신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0.12.27 신설)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0.12.27 신설)
 -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2010.12.27 신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12.27 신설)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2010.12.27 신설)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2010.12.27 신설)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2010.12.27 신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3배수에서 4%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함. 다만, 중과세 배제업종에 직접 사용하거나 법인의 사원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을 적용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10.09.20 개정)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2010.09.20 개정)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2013.01.01 개정)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2010.09.20 개정)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10.09.20 개정)**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및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가 배제됨
- 모든 문화예술단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와 안전행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적용됨

사. 평생교육시설 및 문화예술단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1) 대상 및 단체

- 아래 평생교육시설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자(인적요건 없음)
 - ①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 ③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 ④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예술단체이면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 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 ②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현재 고시된 단체는 없음)

2) 세제의 개요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임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임.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임.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3) 혜택(수혜 내용)

-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 또한,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4) 관련 세법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5) 조문 내용 및 해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3.01.01 개정)

-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9.20 제정)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2010.09.20 제정)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2010.09.20 제정)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2010.09.20 제정)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2010.09.20 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013.01.01 개정)
- ②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도서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2011.12.31 단서개정)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011.12.31 신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1.12.31 신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011.12.31 신설)

-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2010.09.20 제정)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2010.09.20 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2010.09.20 제정)

- 모든 문화예술단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와 안전행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적용되는 것임

아.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대상 및 단체

- ① 세액공제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개인 또는 법인) ②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2) 세제의 개요

- 세액공제는 법인세 및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써 경감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영구히 소멸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0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하여 도입된 것으로, 고용증가인원이 있는 투자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임. 조특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3) 혜택(수혜 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및 소득세(사업소득분)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2%~4%를 기본공제하되, 고용규모에 따라 추가적으로 3%를 공제함. 이 때 추가공제의 한도금액은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규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기본공제 = 투자금액의 4%(비중소기업의 경우 2~3%)

추가공제 = 투자금액의 3%

(*)추가공제 한도 = ①+②+③-④

① 해당 사업연도에 채용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② 해당 사업연도에 채용한 청년근로자 × 1천500만원

③ 기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수 × 1천만원)

④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받는 금액

4) 관련 세법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5) 조문 내용 및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27 제목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27 제목개정)] [부칙]

-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2013.01.01 단서신설) [부칙]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2013.01.01 개정)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2013.01.01 개정)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013.01.01 개정)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3.01.01 개정)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천만원(2011.12.31 개정) [부칙]
 -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천500만원(2011.12.31 개정) [부칙]
 -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천만원(2011.12.31 개정) [부칙]
 -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2011.12.31 개정) [부칙]

-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사업소득분)에서 투자액의 2%~4%를 기본공제하되, 고용규모에 따라 추가적으로 3%를 공제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30 제목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2013.02.15 개정) [부칙]
- 1-31. 생략
 3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2013.02.15 개정) [부칙]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어 세액의 일부를 공제되므로 조세부담이 경감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2011.04.07 제목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2009.08.28 개정)

(하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09.04.07 개정)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009.08.28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2012.02.28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2012.02.28 개정)
4. 삭제(2006.04.17)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는 유희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2012.02.28 개정)

- 사업용자산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의미하지만 토지와 건축물은 제외하고 있다.

자. 공연산업(자영업술가 제외)관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1) 대상 및 단체

-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 ②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2) 세제의 개요

- 세액감면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특정한 소득(감면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법인세액에서 감면하여 주는 제도임. 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중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감면하여 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임. 조세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3) 혜택(수혜 내용)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함

4) 관련 세법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5) 조문 내용 및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3.01.01

- 개정) [부칙]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부칙]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10.01.01 개정)
- 1-15. 생략
-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08.12.26 개정)**
- 17-27. 생략
- (하략)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세액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함

차.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업예술가 제외)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1) 대상 및 단체

- ① 중소기업(법인, 개인)으로서 ②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2) 세제의 개요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조특법 제7조 제1항 열거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해주는 제도임. 감면율은 당해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이 수도권내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3) 혜택(수혜 내용)

-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아래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함

가)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

[표 2-5] 수도권 내 본점·주사무소 소재시 감면업종 및 감면율

감면업종	감면율
도매업 등	소기업 10%
지식기반산업	소기업 20%(중기업 10%)
그 외	소기업 20%

나) 본점·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표 2-6] 수도권 외의 지역 본점·주사무소 소재시 감면업종 및 감면율

감면업종	감면율	
	수도권 내 사업장	수도권 외 사업장
도매업 등	소기업 10%	소기업 10%(중기업 5%)
지식기반산업	소기업 20%(중기업 10%)	소기업 30%(중기업 15%)
그 외	소기업 20%	소기업 30%(중기업 15%)

4) 관련 세법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5) 조문 내용 및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1.12.31 개정) [부칙]

1. 감면업종(2008.12.26 개정)

(중략)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08.12.26 개정)

(중략)

2. 감면비율(2004.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2010.01.0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2010.01.0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2010.01.0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2010.01.01 개정)

(하략)

-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함

- 감면비율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수도권 내인지 외인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략)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중략)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2.15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2005.02.19 법령개정) [부칙]
2. 삭제(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2012.02.02 개정)

(하락)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중략)

-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부칙]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2000.12.29 신설)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2009.04.2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2000.12.29 신설)

(하락)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소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함

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대상 및 단체

- ①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을 ②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안의 사업시행자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을 수용한 자

2) 세제의 개요

- 양도소득세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등과 같이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상승에 따른 미실현 이익이 양도로 인하여 일시에 실현되므로 개인의 경우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한편, 영리법인의 경우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로서 부담하게 됨. 다만, 대도시권 및 개발사업진행지역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추가(10%~40%)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회 간접자본 건설 등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자의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종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3) 혜택(수혜 내용)

- 공익사업지역에 속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20%(채권 지급분은 25%, 3년 이상 만기 채권 만기 보유 시 40%, 5년 이상 만기 채권의 만기 보유 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4) 관련 세법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5) 조문 내용 및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12.30 제목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12.30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3.01.0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10.01.01 개정) [부칙]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10.01.01 개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10.01.01 개정) [부칙]
-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을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2013.01.01 개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부칙]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010.01.01 개정) [부칙]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2010.01.01 개정) [부칙]

(하략)

- 공익사업지역에 속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20%(채권 지급분은 25%, 3년 이상 만기 채권 만기 보유 시 40%, 5년 이상 만기 채권의 만기 보유 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및 허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

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등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1) 대상 및 단체

- 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②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③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세제의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내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음. 조특법 제121조의2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3) 혜택(수혜 내용)

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 다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를,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를 감면함

$$\text{감면대상세액} = \text{총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text{총과세표준}} \times \text{외국인투자비율} \times 100\% (50\%)$$

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text{감면대상세액} = \text{배당금에 대한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text{총과세표준}} \times 100\%(50\%)$$

다)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를,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를 감면함

$$\text{감면대상세액} = \text{총산출세액} \times \text{외국인투자비율} \times 100\%(50\%)$$

- 한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감면혜택을 주고 있음. 다만,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를,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text{감면대상과세표준}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외국인투자비율} \times 100\%(50\%)$$

4) 관련 세법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조세감면의 기준 등]

5) 조문 내용 및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부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2010.12.27 개정)

(중략)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2010.01.01 개정)

(중략)

-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중략)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2011.12.31 개정)

-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3.01.01 개정)
-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2010.12.27 개정)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2010.12.27 개정)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2010.01.01 개정)

(하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조세감면의 기준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조세감면의 기준 등]

- ⑤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003.12.30 신설) [부칙]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2003.12.30 신설) [부칙]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 제3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2003.12.30 신설) [부칙]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2009.07.30 개정)
 5.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2013.02.15 개정)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1백만불 이상일 것(2008.02.22 신설)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명 이상 고용할 것(2008.02.22 신설)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2012.02.02 신설) (중략)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012.02.02 신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함

4. 수요자 측면의 현행 세제

가. 기부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또는 필요경비산입)

1) 대상 및 단체

- ① 법인 또는 개인(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이 ②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③ 그 금액이 동법에서 정하는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2) 세제의 개요

-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 지출범위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그만큼 과세소득금액 및 법인세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함. 또한 법정기부금도, 지정기부금도 아닌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손금산입한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손금불산입 함
-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업자인 개인은 소득공제와 필요경비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소득공제만 가능함.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범위는 법인세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며, 기부금종류별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 한도 또한 다름

3) 혜택(수혜 내용)

가) 법인인 경우

기부금 종류별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음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50%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이월결손금)×10%

[표 2-7]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분야 관련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구 분	세법조문	내 용
법정기부금	법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따라서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에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법칙 별표6의7]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정기부금	법령 제36조 제1항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칙 별표6의2]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82.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2012.02.28. 신설)

나) 개인인 경우

- 개인(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한다. 다만, 개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제외하여야 함

· 법정기부금 한도 = 소득금액×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 = (소득금액-한도내 법정기부금)×30%
· 지정기부금
i.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 =(소득금액-한도내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ii.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 =(소득금액-한도내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MIN ①(소득금액-한도내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20%
②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표 2-8] 소득세법상 문화예술분야 관련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구 분	세법조문	내 용
법정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소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소령 제80조 제1항 제5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한편, 사업자인 개인이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선택한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는 다음과 같음

· 법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 = (소득금액-이월결손금-한도내 법정기부금)×30%
· 지정기부금
i.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한도내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ii.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한도내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MIN ①(소득금액-이월결손금-한도내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20%
②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종류별 기부금의 범위 및 한도계산방법은 소득공제의 경우와 동일함. 그러나 사업자인 개인이므로 법인과 같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함

4) 관련 세법 조문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 2 [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5) 조문 내용 및 해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p>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부칙]</p> <p>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0.12.30 개정)</p> <p>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2010.12.30 개정)</p> <p>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p> <p>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2010.12.30 개정)</p> <p>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2010.12.30 개정)</p> <p>(중략)</p> <p>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2010.12.30 개정)</p> <p>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p> <p>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2010.12.30 개정)</p> <p>③ 제2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011.12.31 개정) [부칙]</p>

- 법법 제24조 제1항: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금액-법정기부금-이월결손금)×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며,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처리함
- 법법 제24조 제2항: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금액-이월결손금)×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인정함
- 법법 제24조 제4항: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각각 5년·3년 이내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07.02.28 제목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07.02.28 제목개정)] [부칙]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2011.03.31 개정)

(중략)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 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2005.02.19 법령개정)

(중략)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2.15 개정)

-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2008.02.22 개정)
-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2007.02.28 신설)
-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2010.02.18 개정)
-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2012.02.02 개정)
-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2010.02.18 개정)
-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02.02 신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2008.02.29 직제개정)

(중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1998.12.31 개정)

(중략)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2008.02.29 직제개정)

(중략)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1998.12.31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하략)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 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2005.02.19 개정)

-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2001.12.31 개정)
-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 (하략)

○ 법령 제36조 제1항: 지정기부금의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됨

-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 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법칙 별표6의2)

● 법정기부금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2010.12.30 신설)] [부칙]

(중략)

- ⑤ 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2012.02.02 항변개정)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2011.03.31 신설)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2011.03.31 호변개정)
 3.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2.02.02 개정)
 4. 제12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2012.02.02 개정)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2.02.02 개정)
-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012.02.02 개정)

(하략)

○ 법령 제36조의2 제5항: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개설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기간은 6년임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중략)

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1. 삭제(2010.12.30)

2.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0.12.30 개정)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50

3.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0.12.30 개정)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100분의 10

④ 법 제24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⑤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법령 제38조 제3항: 법인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각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법정기부금부터 손금으로 산입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02.03.30 제목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02.03.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011.07.29 개정)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2011.07.29 개정)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82.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2012.02.28.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부칙]

(중략)

④ 영 제36조의2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7

<p>과 같다.(2013.02.23 개정) (하략)</p> <p>[별표 6의기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p> <p>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p> <p>8.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p>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p>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p> <p>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부칙]</p> <p>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0.12.27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p> <p>2. 제1호 외의 경우(2010.12.27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p> <p>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12.31 개정) [부칙]</p> <p>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2010.12.27 개정)</p> <p>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p> <p>(중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부칙]</p> <p>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2012.01.01 개정)</p> <p>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p> <p>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2010.12.27 개정) [부칙]</p>

- 소법 제34조 제1항: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함

i.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한도내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ii.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한도내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MIN ①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한도내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 소법 제34조 제2항: 사업자가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함.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에는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이 포함됨

○ 법법 제34조 제3항: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각각 5년·3년 이내에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 법법 제34조 제4항: 사업자인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포함함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2010.12.27 개정) [부칙]

1. 법정기부금(2009.12.31 개정)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09.12.31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10.12.27 개정)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2010.12.27 개정)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중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6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12.01.01 단서개정) [부칙]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2012.01.01 개정) [부칙]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하락)

○ 소법 제52조 제6항: 거주자(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공제함

· 법정기부금 한도 = 소득금액×100%
· 지정기부금
 i.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 =(소득금액-한도내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ii.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 =(소득금액-한도내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MIN ①(소득금액-한도내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20%
 ②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 소법 제52조 제8항: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각각 5년·3년 이내에 이월하여 소득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2005.02.19 법령개정)

(중략)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2013.03.23 직제개정)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2008.02.22 개정)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2010.02.18 개정)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2008.02.22 신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2008.02.22 신설)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2008.02.22 신설)

바.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2013.03.23 직제개정)

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

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2012.02.02 개정)
(하략)

- 소령 제80조 제1항: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이 포함되며,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중략)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부칙]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3.02.15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삭제(2010.12.30) [부칙]
-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0.12.30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100 [부칙]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2010.12.30 후단개정) [부칙]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0.12.30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부칙]
 - 나. 가목 외의 경우(2010.12.30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부칙]

(하략)

- 소령 제81조 제4항 2의2: 사업자가 조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정치자금기부금이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의 처리와 동일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 2 [기부금의 소득공제 등(2003.12.30 제목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 2 [기부금의 소득공제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제8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52조 제6항·제8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2010.02.18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공제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소령 제112조의2 제1항: 준용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공제함

나. 문화접대비 추가 손금 산입

1) 대상 및 단체

- ① 내국인(법인, 사업자인 개인)이 ②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③ 접대비로 지출한 총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2) 세제의 개요

-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등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손금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건전한 상거래의 확립과 법인비용 지출행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일반접대비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일반접대비의 한도액 = ①+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frac{\text{해당사업연도월수}}{12}$

② (일반수입금액×적용률)+(특정수입금액×적용률×10%)

[표 2-9]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분야 관련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1%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03%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음주·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내국인(법인, 사업자인 개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총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상기의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함. 즉, 문화접대비에 대해서 일반접대비보다 높은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손금 인정범위를 확대시켜주는 것임

3) 혜택(수혜 내용)

- 내국인(법인, 사업자인 개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함

- 이 때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
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
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
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4) 관련 세법 조문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5) 조문 내용 및 해설

● 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2010.12.30 개정)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3.01.01 개정)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하락)

- 법법 제25조 제1항: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함

일반접대비의 한도액=①+②

- ①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frac{\text{해당사업연도월수}}{12}$
- ② (일반수입금액×적용률)+(특정수입금액×적용률×10%)

[표 2-10] 일반접대비의 한도액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1%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03%

● 소득세법 제35조 -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2009.12.31 개정)
 -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3.01.01 단서개정)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하락)

- 소법 제35조 제1항: 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이 때 접대비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법인세법의 경우와 동일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① 삭제(2005.12.31)
-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01.01 개정)
 1. 삭 제(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2010.01.01 개정)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007.12.31 개정)
- ③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11.12.31 개정)[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내국인(법인, 사업자인 개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중략)

- ⑤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010.02.18 단서신설) [부칙]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2007.08.06 신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2007.08.06 신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2007.08.06 신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2007.08.06 신설)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2007.08.06 신설)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2010.02.18 신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절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2010.02.18 신설)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2010.02.18 신설)
 9.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2012.02.02 신설)
- ⑥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문화접대비의 범위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등이 포함됨
- 이 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됨

다. 문화예술사업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1) 대상 및 단체

① 면세대상 문화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② 면세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자

2) 세제의 개요

○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되는 조세로써,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모두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만,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국민후생용역
- 문화관련 재화·용역
- 부가가치 생산요소인 재화·용역
- 기타(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하는 재화·용역 등)

○ 이 중 면세대상 문화관련 재화·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예의 입장

○ 한편,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만 일부 재화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음

3) 혜택(수혜 내용)

가) 도서관 등의 입장용역 면세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예의 입장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함.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개

하는 장소, 고분, 사찰 및 전쟁기념사업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포함하며 동물원, 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이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 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포함하지 아니함

나)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및 아마추어 운동경기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함

- ①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며 골동품(관세율번호 제 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함. 또한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품으로 보지 아니함
- ②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에 관한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말하는데, 이 경우 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을 말하며 발표회의 행사주체는 묻지 않음
- ③ 문화행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말하며 행사주체는 묻지 않음
- ④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예술행사, 문화행사는 영리성 유무에 의거 과세/면세로 구분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는 다음의 행사를 말함

-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써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다) 출품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면세함

4) 관련 세법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0-5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2-36-1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범위]

5) 조문 내용 및 해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2010.01.01 개정)

(중략)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2010.01.01 개정)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2010.01.01 호변개정)

(중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중략)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하략)

- 부가세법 제1항 제15호 및 제16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및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함
- 부가세법 제2항 제10호: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면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2010.02.18 개정)
 - ③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2010.02.18 개정)
 - ④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승급·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부가령 제36조: 면세대상 예술창작품은 골동품을 제외하며,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면세함

●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0-5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고분·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2011.02.01 개정)
-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08.10.14 개정)

●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2000.08.0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2011.02.01 개정)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2000.08.0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08.0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08.0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08.0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08.01 신설)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2011.02.01 개정)

●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범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2-36-1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범위]

- ①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2012.07.27 개정)
- ②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2012.07.27 개정)**
 1. 사전행사계획서에 따라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써 사전계획서에 따라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 ③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주관하는 자(프로모터를 포함한다)와 흥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 등과 관련하여 받는 입장료·광고료·방송중계권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과세한다.(2012.07.27 개정)

라.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비과세

1) 대상 및 단체

○ 비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을 양도한 자

2) 세제의 개요

○ 소득세법에서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서 과세함. 다만, 미술품 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미술품에 한해 과세하되,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양도가액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음. 더 나아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을 양도하거나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있음

3) 혜택(수혜 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을 양도하거나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4) 관련 세법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5) 조문 내용 및 해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중략)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7.12.31 개정)

(중략)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8.12.26 신설)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 소법 제12조 제5호: 서화·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함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중략)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부칙]

(하략)

○ 소법 제21조: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07.02.28 제목개정)]

(중략)

⑫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2010.12.30 항변개정)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9.02.04 신설)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2009.02.04 신설)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2009.02.04 신설)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09.02.04 신설)

○ 소령 제41조 제12항: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미술품(국내생존작가의 작품은 제외)에 한해 과세함

마. 기업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비 인정범위 상향 조정

1) 대상 및 단체

- 법인이 ①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3백만 원 이하인 미술품을 구입한 경우로서 ②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비치하고 ③그 취득가액을 취득한 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 세제의 개요

- 법인세법상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함.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불건전한 자산운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무관자산(부동산·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고 있음
- 법인세법에서는 서화 및 골동품을 업무무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함.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3백만 원 이하인 미술품을 취득하고 취득한 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함. 개정 전에는 취득가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었으나 2009년 2월 4일 개정으로 그 한도가 3백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3) 혜택(수혜 내용)

-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할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3백만 원 이하인 미술품을 취득하고 취득한 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함

4) 관련 세법 조문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5) 조문 내용 및 해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0.12.30 개정)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2011.06.03 개정)
(중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1998.12.31 개정)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2005.02.19 단서개정)

- 법령 제49조 제1항: 서화 및 골동품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함.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중략)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 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2009.02.04 개정)

(하략)

- 법령 제19조: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할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3백만 원 이하인 미술품을 취득하고 취득한 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함

III. 산업연관분석의 활용

- 조세정책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특정 산업이나 거래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세수감소가 수반됨
- 문화예술분야의 공급자에 대한 세제의 경우 해당 단체 또는 기업이 부담할 세제가 줄어들음으로 인해 2차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됨
- 문화예술분야의 수요자에 대한 세제의 경우 예술단체의 기부 또는 사업수입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세수감소액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됨
- 세제의 도입 또는 개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 및 취업 유발계수 등의 계량적 효과를 파악한 후 비계량적 효과와 제도의 의미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야 함
- 따라서 8개의 세제 개선안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계수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1. 산업연관분석의 의의²⁾

- 산업연관표란 국민경제내의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되, 산업간 연관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어 소비되고 투자되는 순환과정에서 특정 상품이 다른 분야에 얼마나 사용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함
- 국민경제를 나타내는 국민소득 통계는 중간재를 제외함으로써,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을 제거하여 최종 생산물에 대한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간과정에서 산업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곤란함
-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은 소득순환과 산업간 순환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 가능함
 - 소득순환은 소득의 발생으로부터 분배 및 처분과정(이윤, 임금, 이자 등)으로 나타나고(처분국민소득), 산업간 순환은 생산부문 상호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로 나타남(지출국민소득)
- 국민소득 분석은 소득순환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며 산업연관분석은 소득발생 배후의 생산구조를 산업부문간의 기술적인 상호의존관계에 주목함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간 연관관계에 기초하여 산업별 수요증가가 각 산업의 생산활동이나 고용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함. 따라서

2) 본 장의 상당부분은 김상규(1998) 및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해설편' 상의 내용을 발췌, 정리 및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최종수요가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음

2. 산업연관표의 목적

- 산업부문 상호간의 거래인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하는 부분을 "내생부문"이라 하며, 최종수요와 부가가치를 기록하는 부분을 "외생부문"이라 함
 - 산업연관표는 내생부문과 외생부문으로 구성되며, 내생부문은 외생부문의 수치가 모형 밖에서 주어지면 이에 따라 수동적으로 모형 내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부분이란 의미임
- 이러한 내생부문은 산업연관표 작성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작성된 표의 분석이나 이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외생부문은 내생부문과는 관계없이 모형 밖에서 값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며, 외생부문의 변동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 산업연관표의 작성 목적이라 할 수 있음

3. 산업연관분석 방법론³⁾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는 수요 유도형 모형과 공급 유도형 모형 및 물가파급효과 모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수요 유도형을 중심으로 설명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연관분석해설(2007)을 참고
- 수요유도형 모형에 의한 승수효과의 분석에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전방 및 후방연쇄효과, 물가파급효과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 및 취업유발계수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함

가. 생산유발계수

- 산업연관표의 형식을 행렬대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3) 정상철, 콘텐츠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Z + Y - M = X \quad (1)$$

$$AX + Y - M = X \quad (2)$$

$$\begin{pmatrix} a_{11} & a_{12} & \cdots & a_{1n} \\ a_{21} & a_{22} & \cdots & a_{2n} \\ \vdots & & \ddots & \vdots \\ a_{n1} & a_{n2} & \cdots & a_{nn} \end{pmatrix} \begin{pmatrix} X_1 \\ X_2 \\ \vdots \\ X_n \end{pmatrix} + \begin{pmatrix} Y_1 \\ Y_2 \\ \vdots \\ Y_n \end{pmatrix} - \begin{pmatrix} M_1 \\ M_2 \\ \vdots \\ M_n \end{pmatrix} = \begin{pmatrix} X_1 \\ X_2 \\ \vdots \\ X_n \end{pmatrix} \quad (3)$$

$$\sum_{j=1}^n a_{ij} X_j + Y_i - M_i = X_i \quad (4)$$

- 상식식(4)는 어떠한 산업 i 의 총산출은 각각의 j 산업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에 투입된 산업 i 의 산출물들과의 합과 산업 i 의 최종수요를 더하고 산업 i 의 수입을 공제한 값이 됨 (i 는 행을, j 는 열을 나타냄)

-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은 행렬연산을 통해 전체 산업의 총생산(총수요)을 파악할 수 있음

$$X = AX + (Y - M) \quad (5)$$

$$(I - A)X = (Y - M) \quad (6)$$

$$X = (I - A)^{-1}(Y - M) \quad (7)$$

- 이 때, $(I - A)^{-1}$ 를 레온티에프역행렬(Leontief Inverse Matrix)이라고 하며, 수입 M 을 무시하면, $(I - A)^{-1}Y$ 가 되어, 최종 수요의 변화에 따른 생산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유도형 모형'이라고 함

나. 부가가치유발계수

- 최종수요의 발생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고, 산업의 생산 활동 또한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유발함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다음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이때, $\hat{A}^V(I - A^d)^{-1}$ 이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임

$$\hat{A}^V X = V(I - A^d)^{-1} Y^d = X \text{를 대입,}$$

$$\hat{A}^V(I - A^d)^{-1} Y^d = V$$

단, \hat{A}^V 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 V 부가가치(합계)의 벡터

다. 고용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⁴⁾

- 노동유발계수 또는 고용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각 산업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인 노동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도출함. 이때 노동유발계수에서 노동계수를 제한 나머지가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간접노동유발을 의미함
- 노동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계수식은 다음과 같음

$$l = \frac{X}{L}$$

단, l 은 노동계수, L 은 투입 노동량, X 는 총산출액

- 노동계수를 생산유발계수에 대입하여 노동유발계수를 도출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l(I - A^d)^{-1}$ 가 노동유발계수 행렬이 됨

$$l = \frac{X}{L} \text{ 을 풀면 } L = l * X \text{ 가 되며, 여기에}$$

$$X = (I - A^d)^{-1} Y^d \text{ 를 대입하여 풀면}$$

$$L = l(I - A^d)^{-1} Y^d$$

4. 산업연관표의 결정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 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문화산업을 정의하고 이의 분류체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선행연구⁵⁾의 산업연관표 상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콘텐츠산업 분류 중 본 연구에서는 중분류(11개부문) 상의 콘텐츠산업과 문화서비스 자료를 이용할 것임
 - ① 대분류 기준(4개부문) : 농림수산 및 광산업, 제조업, 전력가스 및 건설업, 서비스업
 - ② 중분류 기준(11개부문) : 대분류+기존 주력산업(4개부문)+콘텐츠산업+기타(4개부문)
 - ③ 소분류 기준 : 위의 중분류+콘텐츠산업 세부 산업(6개부문)
-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로 인하여, 직간접적

4) 본 절의 고용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에 대한 내용은 김상규(1998) 및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해설편'과 함께 이강욱(2011)의 내용을 추가하여 요약 및 정리하였음.

5) 정상철, 콘텐츠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증대에 미치는 '총효과'를 의미하며, 산업 연관표가 '물량기준'이 아닌 '금액기준'으로 작성됨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서비스업의 최종수요가 1원 증가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계수만큼의 생산 및 부가가치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고용표 상의 '피용자수'와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최종수요가 10억 원 증가할 때 증가하는 피용자와 취업자 수를 의미하며 경상표는 2009년 화폐가치 기준임
- '피용자수'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것으로, 타인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급여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 '취업자'는 피용자수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러한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를 '노동유발계수'라고도 함
- 조세감면 효과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적용할 각각의 계수는 산업연관표 중분류 상의 콘텐츠 산업과 문화서비스 계수의 평균값을 이용함

[표 3-1] 산업연관표 중분류의 계수 (2009년 경상표 기준)

(단위 : 원, 명)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문화/콘텐츠산업	1.84	0.84	11.39	16.09

IV. 문화예술분야 세제 개선 요구

1.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

가. 도입 배경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받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득액의 50%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전체 전문예술법인·단체 중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는 것임

나. 도입 목적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법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확대를 통하여 법인세 부담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금액을 다시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예술활동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열악한 문화예술법인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를 손금산입 하도록 하여 실제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방문화원과 예술의전당 및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6개 단체에 국한되어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비영리법인(전문예술법인)
 - :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
 -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전문예술법인
 - :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 손금산입(조특법 제74조)

[표 4-1]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현황('12.1월 현재)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임의단체	합계
사단법인	재단법인	소계			
148	59	207	34	336	577

라. 세제 개선 사항

- 세제 특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100% 손금산입을 인정하나,
 - ① 2001년에 국립예술기관 6개 단체 고시 후 고시실적이 없으며, ② 민간 직업예술단체의 전문성 강화라는 동 제도의 취지 고려 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비영리 법인에 한정) 전체에 대한 100% 손금 산입 필요

현행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7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2005.02.19 법명개정)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2005.02.19 법명개정) 3. <u>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2008.02.29 직제개정)</u>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중 비영리법인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2001년 고시)

-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마. 도입 효과

- 세수감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목적사업에 지출함으로써 공익목적 사업이 증대되고 이에 해당하는 고용효과 등의 간접효과가 있음

- 1) 정성적 효과

- 전문예술법인에게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게 하여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면제하게 해 준다는 심리적 효과가 있어 적은 세수감소액으로도 단체의 만족감은 높아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정책적인 효과가 높아질 것임

2) 정량적 효과

-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예술법인의 법인세 납부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가 없어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2013년 2월말 현재 전문예술법인 중 비영리법인은 총 212개 단체였으며, 전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그 중 66%에 해당하는 140곳이 응답함
- 설문조사 당시 2012년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가 다수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에 납부한 법인세 실적을 기초로 분석하였으며, 조사응답 단체 140곳 중 법인세를 납부한 단체는 10곳 이었고 납부금액은 83백만 원 이었음
- 설문조사에 응답한 비영리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설문조사 응답비율을 적용하여 전체 전문예술법인(비영리법인)의 법인세를 추정해 보면 127백만 원이 됨
- 최근 5년(2007~2011년)의 국세통계연보에서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증가추세를 토대로 2014년~2016년도 법인세 납부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4-2]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2011	2014	2015	2016
증가율(%)	100	165.68	184.05	202.41
법인세 추정액	127	210	234	25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를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감소액 만큼 단체가 1차적인 혜택을 보게 되며, 이를 기초로 생산유발액 등의 부가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됨

[표 4-3]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확대에 따른
분야별 효과 추이

(단위 : 백만 원, 명)

해당년도	세수감소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2014	210	386	176	2.39	3.38
2015	234	431	197	2.67	3.77
2016	257	273	216	2.93	4.14

바. 제도의 한계

-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비영리법인이 현재 납부하는 법인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 도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2. 문화예술기업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

가. 도입 배경

- 문화예술기업은 최근 한류열풍과 함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문화예술기업은 특성상 대도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데, 문화예술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경감되기 보다는 오히려 중과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나. 도입 목적

- 현행 세법에서는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업의 경우 지방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더라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기업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여 기업 성장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시설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이 포함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및 관련 시행령(제26조)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취득세(과거 등록세 포함)는 취득자산의 종류와 취득원인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 4%,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7%의 세율을 적용하며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4%의 세율을 합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세법시행령」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서는 취득세 중과배제 업종을 나열하고 있으며,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라. 세제 개선 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6조에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외에 다양한 문화예술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현행	개정(안)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10.09.20 개정)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2010.09.20 개정)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좌동) 3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

마. 도입 효과

- 문화예술기업은 주로 인적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중과배제에 해당하는 세금이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등으로 연결 될 것임

1) 정성적 효과

- 실질적인 세수감소액이 크지 않으면서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으며, 기업이 성장하여 추후 더 많은 세수 확보가 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초기단계인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

2) 정량적 효과

-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기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기업의 재무자료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7개 기업의 자료만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대부분이 뮤지컬 관련 기업이었음
- 티켓 시장 점유율 70%인 인터파크⁶⁾의 2010년 공연 티켓 판매분을 토대로 산출한 뮤지컬 매출 총액은 92,000백만 원이고, 100%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은 131,429백만 원 임

- 자료를 확보한 기업의 2010년 매출액은 93,905백만 원으로 전체 뮤지컬 시장규모의 71.4%에 해당하는 것임
- 조사대상 기업 중 최근 2년간(2010-2011년) 부동산 취득금액(토지, 건물)이 발생한 곳은 1 곳으로 이 기업의 1년 평균 부동산 취득액을 계산하면 1,544백만 원 임
 - 그러므로 현재 적용되는 중과세율 4%에 해당하는 62백만 원을 토대로 100% 추정한 금액은 87백만 원 임
- 부동산 취득액은 년도에 따라 가변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향후 3년간 동일한 비율로 추정하기로 함

[표 4-4] 문화예술기업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에 따른 분야별 효과 추이

(단위 : 백만 원, 명)

해당년도	세수감소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2014	87	160	73	0.99	1.40
2015	87	160	73	0.99	1.40
2016	87	160	73	0.99	1.40

바. 제도의 한계

- 문화예술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문화예술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로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크지 않음

6) 온라인티켓 예매사이트 1위 업체로서 점유율이 약 70% 이상이고 온라인서점, 전문 쇼핑몰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SBS CNBC)

3. 문화예술기업의 지식기반산업에 포함

가. 도입 배경

- 최근 한류 열풍 등으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산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기업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여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나. 도입 목적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산업임에도 시행령에 누락되어 있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10명 이상의 문화예술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지식기반산업이란 기술과 정보를 포함한 지적 능력과 아이디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은 ① 뮤지컬 등 공연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의2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는 바, 동 조항내 지식기반산업에 포함 필요
-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체계)
 -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자영 예술가,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공연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 오페라 유령 : 총수입 2,000백만달러, 제작비 9백만달러, 공연기간 10년이상
 - ** 주라기 공원 : 총수입 913백만달러, 제작비 70백만달러, 상영기간 20주
- 정책 대상자는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이며 수혜자는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관련 수도권내 중기업임(직원 10명이상)
 - * 공연시설 운영업의 52.9%, 공연단체의 61.4%가 수도권내에 위치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감면업종에는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 있음

○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4-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비율

구 분	소기업 ⁷⁾		중기업(소기업 제외한 중소기업)		
	도매업 등	기타 업종	도매업 등	기타업종	지식기반산업
수도권	10	20			10
수도권 외	10	30	5	15	

○ 지식기반산업에는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라. 세제 개선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항에서 지식기반산업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을 포함

7) 이 조항에서 소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면서,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미만,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 등은 50명 미만, 기타는 10명 미만임

용합

- 조사대상 기업 중 2011년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은 3곳으로 납부 총액은 2,064백만 원이며, 전체 문화예술기업을 기준으로 추정 한 법인세 납부금액은 2,891백만 원 이므로 문화예술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시킬 경우 이 중 10%에 해당하는 289백만 원의 세 수 감소가 일어남
- 최근 5년(2006~2010년)의 공연시장 추이⁸⁾를 토대로 2014~2016년도 세수감소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4-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업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함에 따른 효과 추이

(단위 : 백만 원)

	2010	2014	2015	2016
증가율(%)	100	137.14	145.52	153.90
세수감소액	289	396	421	445

- 세수감소액 만큼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므로 이를 기초로 부가적인 경제효과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4-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업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함에 따른 분야별 효과 추이

(단위 : 백만 원, 명)

해당년도	세수감소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2014	396	729	323	4.51	6.37
2015	421	775	354	4.80	6.77
2016	445	819	374	5.07	7.16

바. 제도의 한계

- 문화예술기업의 범주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예를 들어 조명, 음향, 무대 등의 업종과 대중예술 기획사, 이벤트 기획사 등을 포함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8) 이종규, 2010년 공연결산 및 시장전망, 예술경영지원센터 <2011 시장전망>(2010)

4. 개인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가. 도입 배경

-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매년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고 예술 지원 수혜단체들의 위기감 또한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모집현황 : '73년 기관 설립 이후 총 1,745억 원 모금

[표 4-8] 최근 5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모집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순수기부금	5,715	18,500	-	2,720	20
조건부기부금	7,965,616	9,929,925	10,235,824	13,432,372	14,903,172
소 계	7,971,331	9,948,425	10,235,824	13,435,092	14,903,192

*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실적 자료

-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 모집현황 : 10년 기부금 총액은 379억 원(단체당 평균 92백만 원)
- 우리나라 전체 개인과 기업의 기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문화예술분야 기부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임
- 개별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모집역량이 아직 부족하며,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에 한 정하여 우선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전체 문화예술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도입 목적

- 추진근거
 - 국정과제 77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13.3.28.)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 개인 및 법인 세액공제 도입
 - ※ 개인은 연간 100만원 이내 전액, 법인은 연간 매출액의 0.5% 이내 50%
- 추진 필요성

- 일반 복지 분야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문화예술분야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개인의 예술분야 기부금 상승을 기대함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참여 기부자가 증가할 경우, 세수 감소 대비 실질적 기부금액 증가로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지원예산 보완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또한, 기부 참여자가 증가할수록 기부금 수입을 위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 및 관련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예술단체 운영의 투명성 및 예술계의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프랑스 사례

-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법률 (Loi du 1er aout 2003 relative aux mece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 법인: 매출의 0.5% 한도 내에서 공익적 기부금의 60%까지 세액공제, 초과액은 5년간 이월가능
- 개인: 매출의 0.5% 한도 내에서 공익적 기부금의 66%까지 세액공제, 초과액은 5년간 이월가능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 현황 조사 자료

- 개인기부
 - 자선단체 67.0%, 종교단체 24.8%, 문화예술분야 0.2%('09) 『2010 기빙코리아 자료집』(아름다운재단)
 - 자선단체 72.2%, 종교단체 21.6%, 문화예술분야 0.5%('12) 『기빙코리아 2012』(아름다운재단)

○ 문화예술기부 세제혜택 현황

《 문화예술기부 세제혜택 현황 》

○ 지정기부금

- 대상기관

- ① 정부가 허가·인가한 문화예술단체(전문예술법인·단체 포함)
-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세제혜택

-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법정기부금

- 대상기관 :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세제혜택

- 개인: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100% 내에서 손금산입

라. 세제 개선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 신설

- 개인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에 대하여 연 100만원 이내에서 세액공제 도입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 (문화예술기부금의 과세특례) <신설>	제76조의2 (문화예술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한 자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매출액의 1% 한도로 기부금액의 전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거주자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한 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을 산입한다.

마. 도입효과

1) 정성적 효과

- 예술에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술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며,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향후 문화예술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모집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비영리 각 부문이 고르게 성장할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가 증가하게 되면 타 비영리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2) 정량적 효과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획하여 실시하였음

[표 4-9] 개인 기부에 대한 조사의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
조사 지역	전국 16개 시·도
조사 방법	전화조사,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유효 표본	807명
표본 추출	비례층화추출(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조사 기간	2013년 3월 20일 ~ 2013년 3월 22일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pm 3.45\%$
조사 기관	(주)포커스컴퍼니

- 전국 16개 시·도의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 807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종교 기부금(현금)을 제외한 기부금 지출 경험과 해당 금액, 문화예술 단체(분야)에 대한 기부금 지출 경험과 해당하는 금액을 전화 조사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30% 세액공제안, 50% 세액공제안, 100% 세액공제안을 각각 제시 후, 이 때 문화예술 단체(분야)에 대한 기부 의향 및 기부금액을 조사함
- 조사된 ‘기존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액 대비, 각 세액공제안이 책정될 경우의 기부 의향 금액’ 총액을 측정하여 30% 세액공제시, 50% 세액공제시, 100% 세액공제시에 해당하는 각각의 예상 기부금액 증가율을 도출함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과거 기부금 소득공제금액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개인 기부금의 총액을 추정한 후, 이에 ‘기빙코리아(2012)’의 개인 문화예술 기부금 비율 0.5%를 적용하여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금 금액을 추정함
- 효과 분석을 위해서 각 세액공제 비율에 따른 기부금 증가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도입

이후 증가되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금 금액을 산출함

- 설문조사 결과,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금 증가율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남

[표 4-10] 세액공제 비율 별 예상 기부금액 증가율

	30% 세액공제	50% 세액공제	100% 세액공제
기존 대비 증가율	2789.0%	5803.7%	9967.4%

- 30% 세액공제안
 - 30%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기부금액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3년 간 총 기부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4-11] 개인기부금의 30% 세액공제 시 기부추정액과 도입 효과

(단위 :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30% 세액공제시 기부 추정액	1,111,551.88	1,165,656.42	1,219,760.95	1,273,865.49
기부증가액	1,073,076.76	1,125,308.53	1,177,540.30	1,229,772.07
세수감소액 (세액공제)	333,465.56	349,696.93	365,928.29	382,159.65
도입효과	739,611.20	775,611.60	811,612.01	847,612.42

- 이에 따른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2] 개인기부금의 30% 세액공제 시 부가적인 경제 효과

(단위 : 백만 원, 명)

해당년도	세수감소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2014	349,696.93	2,070,567.70	945,259.17	12,817,264.16	18,106,214.25
2015	365,928.29	2,166,674.15	989,133.85	13,412,184.02	18,946,623.43
2016	382,159.65	2,262,780.61	1,033,008.54	14,007,103.88	19,787,032.61

- 50% 세액공제안
 - 50%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기부금액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3년 간 총 기부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4-13] 개인기부금의 50% 세액공제 시 기부추정액과 도입 효과

(단위 :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50% 세액공제시 기부 추정액	2,271,470.00	2,382,033.28	2,492,596.57	2,603,159.86
기부증가액	2,232,994.88	2,341,685.40	2,450,375.92	2,559,066.43
세수감소액 (세액공제)	1,135,735.00	1,191,016.64	1,246,298.29	1,301,579.93
도입효과	1,097,259.88	1,150,668.75	1,204,077.63	1,257,486.51

○ 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4] 개인기부금의 50% 세액공제 시 추가적인 경제 효과

(단위 : 백만 원, 명)

해당년도	세수감소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2014	1,191,016.64	4,308,701.14	1,967,015.74	26,671,796.71	37,677,718.09
2015	1,246,298.29	4,508,691.69	2,058,315.77	27,909,781.73	39,426,548.55
2016	1,301,579.93	4,708,682.23	2,149,615.80	29,147,766.64	41,175,378.86

○ 100% 세액공제안

- 100%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기부금액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3년 간 총 기부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4-15] 개인기부금의 100% 세액공제 시 기부추정액과 도입 효과

(단위 :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100% 세액공제시 기부 추정액	3,873,459.83	4,061,999.61	4,250,539.39	4,439,079.17
기부증가액	3,834,984.71	4,021,651.72	4,208,318.74	4,394,985.75
세수감소액 (세액공제)	3,873,459.83	4,061,999.61	4,250,539.39	4,439,079.17
도입효과	-38,475.12	-40,347.89	-42,220.66	-44,093.42

- 이에 따른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6] 개인기부금의 100% 세액공제시 부가적인 경제효과

(단위 : 백만 원, 명)

해당년도	세수감소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2014	4,061,999.61	7,399,839.16	3,378,187.44	45,806,613.09	64,708,376.17
2015	4,250,539.39	7,743,306.48	3,534,987.74	47,932,750.45	67,711,848.53
2016	4,439,079.17	8,086,773.78	3,691,788.03	50,058,887.69	70,715,320.72

바. 제도의 한계

- 과거 정치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세제를 도입하였을 때 기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경험으로 유추해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개인 기부금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단, 본 연구를 위한 개인 설문조사는 800여 명의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 수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설문한 결과로서, 문화예술 단체(분야)에 대한 작년도 기부금 지출 유경험자의 유효 표본수가 적어(n=13) 표본오차가 크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됨
- 또한, 본 연구를 위한 개인 설문조사에서, 음성으로 지문이 전달되는 전화설문의 특성상, 응답자가 세제개선 시 '향후 문화예술 단체(분야)에 대한 기부금 지출 의향'을 '포괄적인 기부금 지출 의향'과 구분하지 못하고 응답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음

5. 법인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가. 도입 배경

-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매년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고 예술 지원 수혜단체들의 위기감 또한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모집현황: '73년 기관 설립 이후 총 1,745억 원 모금

[표 4-17] 최근 5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모집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순수기부금	5,715	18,500	-	2,720	20
조건부기부금	7,965,616	9,929,925	10,235,824	13,432,372	14,903,172
소 계	7,971,331	9,948,425	10,235,824	13,435,092	14,903,192

*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실적 자료

-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 모집현황: 10년 기부금 총액은 379억 원(단체당 평균 92백만 원)
- 기업의 경우 개인보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이는 기업과 관련 있는 문화재단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결과이며 이를 제외하면 타 분야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개별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모집역량이 아직 부족하며,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에 한 정하여 우선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전체 문화예술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도입 목적

- 추진근거
 - 국정과제 77: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13.3.28.)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 개인 및 법인 세액공제 도입
- ※ 개인은 연간 100만원 이내 전액, 법인은 연간 매출액의 0.5% 이내 50%

○ 추진 필요성

- 사적 재화 특성과 공공재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혼합재로서의 문화예술이 일정 수준의 발전 단계에 이르면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정부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사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함
- 최근 문화접대비 제도와 같이 수요측면을 감안한 제도들도 일부 도입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를 통한 손금산입이나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도 제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은 주로 공급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해 문화예술진흥에 힘써 온 것이 사실임

[표 4-18] 문화예술 공급 부문 세제

적용 대상	관련 세법	주요 내용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비영리문화예술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문화예술관련 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관세법	박물관, 미술관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개별소비세법	박물관, 미술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대도시내 법인 문화예술기업의 지방세 3배 중과세 배제 문화예술단체의 고유업무 사용목적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공연산업(자영예술가)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공연산업(자영예술가) 관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표 4-19] 문화예술 수요 부문 세제(법인)

적용 대상	관련 세법	주요 내용
사업자	법인세법	기부금 손금산입
		문화접대비 추가 손금산입
	부가가치세법	문화예술사업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비사업자	소득세법	기부금 소득공제
	부가가치세법	문화예술사업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기대효과

- 일반 복지 분야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문화예술분야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예술분야 사회공헌의 동기 부여 및 승수효과를 통한 기부금 상승을 기대함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참여 기부자가 증가할 경우, 세수 감소 대비 실질적 기부금액 증가로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지원예산 보완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또한, 기부 참여 기업이 증가할수록 기부금 수입을 위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 및 관련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예술단체 운영의 투명성 및 예술계의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프랑스 사례

-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법률 (Loi du 1er aout 2003 relative aux mece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 법인: 매출의 0.5% 한도 내에서 공익적 기부금의 60%까지 세액공제, 초과액은 5년간 이월가능
- 개인: 매출의 0.5% 한도 내에서 공익적 기부금의 66%까지 세액공제, 초과액은 5년간 이월가능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 현황 조사 자료

- 기업기부
 - 사회복지 51.1%, 문화예술.체육 13.3%, 의료보건 12.3%, 교육 4.8%(’09) 『2010 기업.기업 재단 사회공헌백서』(전국경제인연합회)

○ 문화예술기부 세제혜택 현황

《 문화예술기부 세제혜택 현황 》

○ 지정기부금

- 대상기관

- ① 정부가 허가.인가한 문화예술단체(전문예술법인.단체 포함)
-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세제혜택

- 기업: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의 10%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피상속인 및 상속인 : 지정기부금 단체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법정기부금

- 대상기관 :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세제혜택

- 기업: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50%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라. 세제 개선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 신설

- 법인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에 대하여 연 매출액의 1% 이내에서 세액공제 도입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 (문화예술기부금의 과세특례) <신설>	제76조의2 (문화예술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한 자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매출액의 1% 한도로 기부금액의 전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거주자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한 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을 산입한다.

마. 도입효과

1) 정성적 효과

- 예술에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술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며,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향후 문화예술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모집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비영리 각 부문이 고르게 성장할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가 증가하게 되면 타 비영리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2) 정량적 효과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 대한 설문조사를 기획하여 실시하였음

[표 4-20] 법인 기부에 대한 조사의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법인사업자
조사 지역	전국 16개 시·도
조사 방법	면접원의 컨택을 통한 팩스/이메일 조사
유효 표본	207명
표본 추출	비례층화추출(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조사 기간	2013년 3월 20일 ~ 2013년 3월 29일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pm 6.81\%p$
조사 기관	(주)포커스컴퍼니

- 전국 16개 시·도의 법인사업자 207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종교 기부금(헌금)을 제외한 기부금 지출 경험과 해당 금액, 문화예술 단체(분야)에 대한 기부금 지출 경험과 해당하는 금액을 조사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30% 세액공제안, 50% 세액공제안, 100% 세액공제안을 각각 제시 후, 이 때 문화예술 단체(분야)에 대한 기부 의향 및 기부금액을 조사함
- 조사된 ‘기존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액’ 대비 ‘각 세액공제안이 책정될 경우의 기부 의향 금액’ 총액을 측정하여 30% 세액공제시, 50% 세액공제시, 100% 세액공제시에 해당하는 각각의 예상 기부금액 증가율을 도출함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과거 법인기부금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법인의 기부금 총액을 추정한 후, 이에 ‘기빙코리아 인덱스(2011)’의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금 비율 5.3%를 적용하여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금 금액을 계산함

[표 4-21]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법인사업자의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 신고액

(단위 :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금액	229,202.69	239,851.75	250,500.82	261,149.88

- 효과 분석을 위해서 각 세액공제 비율에 따른 기부금 증가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도입 이후 증가되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법인의 기부금 금액을 산출함
- 설문조사 결과,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금 증가율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남

[표 4-22] 세액공제 비율 별 예상 법인 기부금액 증가율

	30% 세액공제	50% 세액공제	100% 세액공제
기존 대비 증가율	43.4%	288.7%	1027.2%

○ 30% 세액공제 안

- 30%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기부금액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3년 간 총 기부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4-23] 법인기부금의 30% 세액공제 시 기부추정액과 도입 효과

(단위 :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30% 세액공제시 기부 추정액	328,668.00	343,938.36	359,208.72	374,479.08
기부증가액	99,465.32	104,086.61	108,707.90	113,329.19
세수감소액(세액공제)	98,600.40	103,181.51	107,762.62	112,343.72
도입효과	864.92	905.10	945.29	985.47

○ 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4] 법인기부금의 30% 세액공제 시 추가적인 경제 효과

(단위 : 백만 원, 명)

해당년도	세수감소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2014	103,181.51	191,519.36	87,432.75	1,185,546.49	1,674,753.55
2015	107,762.62	200,022.54	91,314.64	1,238,182.98	1,749,110.11
2016	112,343.72	208,525.71	95,196.52	1,290,819.47	1,823,466.67

○ 50% 세액공제 안

- 50%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기부금액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3년 간 총 기부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4-25] 법인기부금의 50% 세액공제 시 기부추정액과 도입 효과

(단위 :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50% 세액공제시 기부 추정액	890,863.27	932,253.98	973,644.69	1,015,035.39
기부증가액	661,660.58	692,402.23	723,143.87	753,885.51
세수감소액 (세액공제)	445,431.63	466,126.99	486,822.34	507,517.70
도입효과	216,228.95	226,275.24	236,321.53	246,367.81

○ 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6] 법인기부금의 50% 세액공제 시 추가적인 경제 효과

(단위 : 백만 원, 명)

해당년도	세수감소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2014	466,126.99	1,274,020.10	581,617.87	7,886,461.40	11,140,751.88
2015	486,822.34	1,330,584.72	607,440.85	8,236,608.68	11,635,384.87
2016	507,517.70	1,387,149.34	633,263.83	8,586,755.96	12,130,017.86

○ 100% 세액공제 안

- 100%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기부금액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3년 간 총 기부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4-27] 법인기부금의 100% 세액공제 시 기부추정액과 도입 효과

(단위 : 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100% 세액공제시 기부 추정액	2,583,503.48	2,703,536.53	2,823,569.59	2,943,602.65
기부증가액	2,354,300.79	2,463,684.78	2,573,068.77	2,682,452.76
세수감소액 (세액공제)	2,583,503.48	2,703,536.53	2,823,569.59	2,943,602.65
도입효과	-229,202.69	-239,851.75	-250,500.82	-261,149.88

○ 이에 따른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8] 법인기부금의 100% 세액공제 시 부가적인 경제 효과

(단위 : 백만 원, 명)

해당년도	세수감소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2014	2,703,536.53	4,533,180.00	2,069,495.22	28,061,369.64	39,640,688.11
2015	2,823,569.59	4,734,446.54	2,161,377.77	29,307,253.29	41,400,676.51
2016	2,943,602.65	4,935,713.08	2,253,260.32	30,553,136.94	43,160,664.91

바. 제도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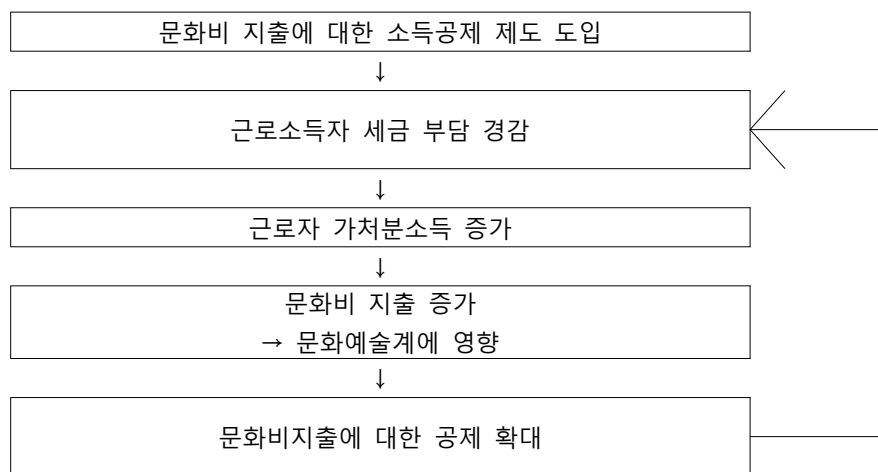
-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7개의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 수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설문한 결과로서, 문화예술 단체(분야)에 대한 작년도 기부금 지출 유경험자의 유효 표본수가 적어(n=6) 표본오차가 크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됨

6. 문화비 지출 특별공제 도입

가. 도입 배경

- 문화비 지출은 교육비, 의료비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삶의 질 및 근로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함
- ‘공급자 직접 지원’에서 ‘수요자 간접 지원’으로의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선순환 구조 정착 및 자생력 강화가 가능함

[그림 4-1] 문화비 지출로 인한 선순환



나. 도입 목적

- 개인의 문화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문화비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 가구당 월 문화비 지출액은 약 5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국민의 19.1%가 예술행사 관람 장애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걸림돌로 꼽고 있음
※ 문화서비스 28천원, 서적 18천원 등 (2012년 3/4분기 기준)⁹⁾
- 현행법상 개인이 지출한 문화비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혜택은 없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특별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나, 도서구입비 등 문화비 지출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CTI 가치와 전망’, 제11호(2012-11). (2012.12.18.)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예술 소비지출의 소득공제 도입 연구(2003.10.)’를 진행한 바 있으며 조세감면효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음

< 조세감면 효과 >		
○ 전제		
- 감면대상: 신문도서비(5항목), 교양오락용품기구비(30항목), 교양오락서비스비(20항목) 등 55개 항목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의 ‘교양오락비’ 항목(스포츠, 여행 등 여가활동 전반)		
- 감면효과: 연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문화비 지출 전액을 공제		
조세감면 후 문화비 지출 창출 총액		
세액감소(A)	가구당 가처분소득 증가분(B)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문화비 지출 창출 총액(C)
2,246.9 억 원	15,699 원	99.9 억 원

- 세액감소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로 문화비가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효과 예측
이므로 제도 도입 시 증가할 문화비 지출액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수반되어야 함

라. 세제 개선 사항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제10항 신설
 - 감면대상: 공연·영화 관람, 박물관·미술관 이용, 게임, 음반, 간행물 구입 등 문화비 지출
 - 감면효과: 1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

현행	개정(안)
제52조 (특별공제) ⑩ <신설>	제52조 (특별공제) 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문화비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문화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구입 금액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금액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 및 「공연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의 관람료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도서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5.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납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비 지출금액

마. 도입효과

1) 정성적 효과

-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문화비 지출이 늘어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 융성’의 가장 기초적인 국민의 문화 향유가 별도의 재정 지출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소득이 증가되어 납부세액이 증대되므로 직접적인 세수 감소액 이상의 세수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음

2) 정량적 효과

- 문화비 지출 특별소득공제에 대한 효과분석을 위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기획하여 실시하였음

[표 4-29]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조사의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
조사 지역	전국 16개 시·도
조사 방법	전화조사,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유효 표본	807명
표본 추출	비례층화추출(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조사 기간	2013년 3월 20일 ~ 2013년 3월 22일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pm 3.45\%p$
조사 기관	(주)포커스컴퍼니

- 전국 16개 시·도의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 807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문화비에 해당하는 지출 경험 유무와 해당 금액을 전화 조사함
- 지출한 문화비에 대하여 연 100만 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할 경우 향후 문화비를 지출할 의향과, 지출의향이 있을 경우 1년간 지출할 문화비 금액을 조사함
- 조사된 ‘기존 문화비 지출 금액’ 대비 ‘세제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의 문화비 지출 의향 금액’ 총액을 측정하여 예상 문화비 지출 금액 증가율을 도출함
- 문화비 지출로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지출항목 중 오락문화비에 포함되는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항목을 사용함
 - ‘문화서비스’ 항목 하의 ‘컨텐츠’ 항목에 음악 영화 등의 문화컨텐츠 구매 및 게임 소프트웨어 구매가 포함됨
 - ‘기타인쇄물’ 항목에 신문, 잡지가 포함됨
 - 연간 문화비 지출 규모 파악을 위해 이 항목들만 사용할 경우, 문화 관련 교육비 항목과 게임 콘솔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계적으로 제외되는 한계가 있으나, 문화비 특정 교육비 항목으로 조사된 데이터가 없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관련 문화비 지출은 제외됨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지출항목의 과거 3개년간의 경향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2016년까지의 금액을 계산함
-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당 평균 지출 금액을 전체 문화비 지출 규모로 환산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와 장례가구추계(2010)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수를 사용함
-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문화비 지출 x 가구수 = 전체 문화비 지출 총액’ 산출 후,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경향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2016년까지의 문화비 지출 총액을 산출함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의하여 각 연도별 과세표준에서 결정세액 비율을 산정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를 문화비 지출로 인한 소득공제액에 적용함
- 효과 분석을 위해서, 과거 경향에 따른 향후 3개년 간 문화비 지출 규모와, 세제개선안에 따른 문화비 지출 금액 증가율을 감안한 문화비 지출 총액을 비교함
- 문화비 지출 규모의 3개년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기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오락 문화비 지출 항목 중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항목을 사용함
- 항목별 연평균증가율을 계산하여 2016년까지의 가구당 평균 문화비 지출 규모를 도출함

[표 4-30] 가구당 평균 오락문화비 항목별 지출 현황¹⁰⁾ 및 예상

(단위 : 원)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2010	22,058.14	17,939.34	2,271.25
2011	23,627.36	16,379.78	2,090.41
2012	24,978.38	14,474.31	1,939.30
2013e	26,580.43	13,001.50	1,791.99
2014e	28,285.23	11,678.56	1,655.87
2015e	30,099.37	10,490.23	1,530.08
2016e	32,029.86	9,422.82	1,413.86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의 전국 가구 수 및 장례가구추계¹¹⁾의 전국 추계가구 수(만 20세 이상 가구주)를 적용하여 전체 문화비 지출 규모를 추정함

1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1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장례가구추계, 전국(2010)

[표 4-31] 전국 연령별 추계가구 수

(단위 : 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전국	19세 이하	만20세 이상
2011	17,687,001	84,514	17,602,487
2012	17,950,675	84,289	17,866,386
2013	18,206,328	83,109	18,123,219
2014	18,457,628	81,392	18,376,236
2015	18,705,004	79,269	18,625,735
2016	18,948,342	76,778	18,871,564

[표 4-32] 2010년 ~ 2012년 문화비 지출 규모

(단위 : 가구, 백만 원)

항목	2010	2011	2012
전국 만20세 이상 가구주 가구 수	17,271,272	17,602,487	17,866,386
문화서비스	380,972.14	415,900.30	446,273.38
서적	309,835.22	288,324.86	258,603.61
기타인쇄물	39,227.38	36,796.41	34,648.28
합계	730,034.73	741,021.58	739,525.27

○ 2010년도~2012년도 문화비 지출 합계의 3개년도 연평균증가율은 0.65%로 나타남

○ 이에 따른 향후 3개년 간 문화비 지출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4-33] 기존 증가율에 따른 향후 3개년도 문화비 지출 규모

(단위 : 가구, 백만 원)

항목	2014e	2015e	2016e
전국 만20세 이상 가구주 가구 수	18,376,236	18,625,735	18,871,564
문화비 지출액	749,139.19	753,992.91	758,878.08

○ 설문 조사 결과, 세제개선안 적용시 문화비 지출 의향 금액의 증가율은 27.58%로 나타남

[표 4-34]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문화비 지출 증가율

	연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기존 대비 증가율	27.58%

○ 조사된 증가율을 적용한 향후 문화비 지출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4-35] 조사된 증가율에 따른 향후 문화비¹²⁾ 지출 총액

(단위 : 백만 원)

	2014	2015	2016
세제개정안 이후 문화비 지출 총액	955,779.53	961,972.10	968,204.78

○ 이에 따라, 세제개정안 적용 후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표 4-36]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액

(단위 : 백만 원)

	2014	2015	2016
세제개정안 이후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액	528,623.63	532,048.62	535,495.80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의하여 각 연도별 과세표준에서 결정세액 비율을 산정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최근 3개년 평균 실효세율은 10.79%로 산출됨

[표 4-37] 근로소득 실효세율

(단위 : 백만 원)

	2009년	2010년	2011년
과세표준	121,318,164.84	144,657,390.50	161,840,404.98
결정세액	12,851,856.55	15,586,274.96	17,801,868.26
실효세율	10.59%	10.77%	11.00%

○ 계산된 3개년 실효세율 평균 10.79%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적용하여 세수감소액을 산출함

[표 4-38]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의 세수감소액 및 세제 도입 효과

(단위 : 백만 원)

연도	2014	2015	2016
문화비 지출 증가액	206,640.35	207,979.18	209,326.70
세수감소액	57,034.56	57,404.09	57,776.019
세제 도입에 따른 정책적 효과	149,605.78	150,575.09	151,550.68

12) 문화비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항목을 합산한 수치를 사용함

- 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4-39]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의 추가적인 경제 효과

(단위 : 백만 원, 명)

해당년도	문화비 지출 증가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2014	206,640.35	380,218.24	173,577.89	2,353,633.59	3,324,843.23
2015	207,979.18	382,681.69	174,702.51	2,368,882.86	3,346,385.01
2016	209,326.70	385,161.13	175,834.43	2,384,231.11	3,368,066.60

바. 제도의 한계

- 본 연구를 위한 개인 설문조사는 807명을 대상으로 문화비 지출 경험 및 의향에 대해 설문한 결과로서, 소득수준 별로 유효표본수가 $n > 30$ 인 경우가 존재하여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됨
- 연간 문화비 지출 규모 파악을 위해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지출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화 관련 교육비 항목과 게임 콘솔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계적으로 제외되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에 문화비 특정 교육비 항목으로 조사된 데이터가 없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관련 문화비 지출 금액은 제외됨

7. 미술품 구입 시 손비인정 범위 확대

가. 도입 배경

- 미술시장 평균 거래가액 및 미술은행 평균 작품구입비 등을 감안할 때 손비로 인정하는 미술품 취득가액 한도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
 - 국내 대표적 공개 경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미술품의 경우 평균 26백만 원 수준('11년 기준)

[표 4-40] 국내 경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미술품

구 분	낙찰 작수(점)	낙찰액(천 원)	평균낙찰액(천 원)
서울 옥션	1,216	32,323,910	26,582
K 옥션	1,308	32,567,431	24,898

- 정부 등을 대상으로 미술품을 대여, 국민의 미술감상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술은행의 작품 구입비 역시 평균 6백만 원 상회

[표 4-41] 미술은행의 3년간 구입 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3년 합계	평균가격
구입작품(점)	185	143	267	595	-
구입예산(천 원)	1,251,870	1,043,478	1,509,850	3,805,198	6,395

- '2008년 미술시장 실태조사'에서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가 지적한 국내 미술시장 규제법령 문제 인식을 살펴보면, 기업의 미술 작품 구입 시 손비처리 한도액이 너무 낮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2010년 미술시장 실태조사'에서 미술시장규모는 약 4,839억 원(27,729점)으로 추정되고 그 평균 거래금액은 약 17백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예술특구 및 창의원 조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술계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의 미술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절대다수가 공감하였고, '개인과 기업 등 내수시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설정 의견이 4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¹³⁾ 그 다음으로 '미술시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미술 유통 체계의 선진화' 등을 꼽았음
- 미술품이 활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수불가결함
 - 간접지원의 한 형태인 세제를 놓고 볼 때, 미술품의 생산자인 화가 등에 대한 세제지원 보다는 거래 상대방인 수요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

13)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특구 및 창의원 조성방안 연구, (2010)

람직함

-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 취지 달성 곤란함

[법인세 시행령 개정 이유(기재부, '09.2)]

가. 구입비용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영 제 19조제 17호)

- 1)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할 필요
- 2) 구입비용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를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확대

-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손비를 인정하는 것은 미술작품이 가치재(merit goods)로서 작품 취득이 사회적 편익을 수반하기 때문임
- 프랑스의 경우 일반기업이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경우 100% 손비를 인정해주고 있음. 단, 그 작품을 대중에게 일정기간 동안 전시해야 함

나. 도입목적

-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의 경우 자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구입 시 손금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의 미술품 구입을 확대하기 위함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 미술품의 수요자로는 개인 소장자, 공공기관, 박물관·미술관, 기업 등이 있음.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에 대하여는 미술은행 등의 지원제도가 존재하나 개인소장자와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는 세제를 통하여 수요를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왜냐하면 박물관·미술관이 미술품 구입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없으며,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모두 감면되고 있기 때문임
 - 결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를 지원하여 미술의 수요를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상황
-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관련되는 세금은 법인세이며, 미술품을 자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손금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기업이 납부할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다행히 이러한 세제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음
 - 미술품의 특성을 회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미술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300만 원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임

[표 4-42] 미술거래 관련 국내 세제 현황(국세 기준)

납세자	과세	면제
작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화랑, 경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위탁판매거래 대상)	관세
구매자(개인, 법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및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미술관, 박물관	-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창작물에 한함)

- 기업이 미술작품을 구입할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취급(비업무용 자산)하여 원칙적으로 손비 처리 불가(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단, 미술작품을 장식·환경미화의 목적으로 공용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손비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 '09년 이전에는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만 인정, '09. 2월 300만 원 상향 조정(시행령 개정)

법인세법 제27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0.12.30 개정)
2.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1998.12.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2005.02.19 단서개정)

라. 세제 개선 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를 개정하여 법인의 미술품 구입 시 손비 인정 범위를 현행 3백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현행	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마. 조사 방법

- 본 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의뢰를 받아 진행했던, ‘기업의 미술품 구입 활성화 방안 연구’ (2011)를 인용함

1) 설문 조사

- 기업들의 미술품 구입관련 세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내용에는 미술품 구입 금액뿐만 아니라 미술품의 구입 목적, 회계처리 방법, 미술품 보유기간, 재판매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음.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총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전화조사 및 Fax조사, 95% 신뢰수준 ± 4.38
-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기업 500개중 미술품 구매경험이 있는 기업이 101개, 미술품 구매경험이 없는 기업이 399개인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분석에서는 미술품 구매 경험이 없는 기업을 제외한 101개 기업의 데이터가 활용됨

[표 4-43] 기업의 미술품 구입 손비 인정 범위 확대의 효과 및 세수감소액 추정 과정

구 분	추 정 과 정
1 단계	설문조사 대상 총 500개 기업의 미술품 구매 경험 유무로 구분함
2 단계	미술품 구매 경험이 있는 대상 기업의 미술품 구매금액, 목적, 금액별 구매 비중 등을 조사함
3 단계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을 구입 즉시 손금 처리를 할 경우, 증가율을 산출함
4 단계	기업의 매출액 대비 미술품 구입 비중을 산출함
5 단계	2009 국세통계연보 상 전체기업매출액에 [4단계]에서 산출한 매출액 대비 미술품 구입 비중을 곱한 후, 설문에서 얻은 미술품 구입 경험기업 비율을 곱하여 미술품 구입액을 추정함
6 단계	[5단계]의 미술품 구입 추정액에 설문에서 얻은 미술품 금액별 구매비율을 적용하여 미술품 금액이 300~1,000만 원인 구간의 구입 추정액을 산출함
7 단계	1,000만 원까지 손금 산입할 경우, 전액을 구입해당연도에 손금산입이 되고, 현행 세법일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년간 감가상각 후 처분한다고 가정하여 해마다 손금 산입되는 금액을 산출함
8 단계	미술품 구입 추정액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현행이자율은 5%, 법인세율은 20%로 하여 세수감소액을 산출함

- 설문조사 대상 기업 중 미술품 구매 경험이 있는 기업은 101개이며, 중소기업 63개 (62.38%), 대기업 및 중견기업 38개(37.62%)임
- 설문조사 기업의 미술품 구입액 : 101개 기업의 평균 미술품 구매액은 2,142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매출액 대비 0.0036% 수준임
- 미술품 구매 비중
 - 300만 원 미만이 57%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26.44%
 - 1,000만 원 이상의 미술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
- 미술품의 취득 목적 : 미술품 구매금액별로 미술품의 취득목적을 살펴보면, 환경미화를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영진의 관심이었으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기업은 아주 소수에 불과함
- 미술품의 회계처리
 - 300만 원 미만의 미술품은 대부분(67%) 비용처리를 하고 있으며,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미술품의 경우에는 40%의 기업이 비용처리를 하고 있음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미술품의 경우에는 50%가 비업무용자산으로 구분하였고, 30% 정도는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응답
- 미술품의 현금화 가능성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향후에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300만 원 미만의 미술품의 경우 5% 미만
-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미술품의 경우 현금화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개로 약 15% 정도임. 또한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미술품의 경우에는 41% 정도가 가능성 있다고 응답
- 1억 원 이상의 미술품의 경우 가능성 있다고 답한 기업은 없었으며, 이는 미술품 장식제도에 의한 조각품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 구입 즉시 손금 처리 적정 금액

- 미술품을 구입 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101개 기업 중 1개 기업을 제외한 100개 기업이 응답
- 미술품을 구입 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300만 원 미만으로 답변한 기업이 38.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이 35.64%임. 반면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도 손금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기업은 24.75%로 나타남

- 구매 증가율: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을 구입 즉시 손금 처리를 한다면 총 101개 기업 중 27개 기업이 더 구입할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전체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9.92%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약 10%)

[표 4-44] 설문조사 기업의 매출액 및 미술품 구입액

(단위 : 천 원, %)

설문조사 기업의 매출액	591,286,531
설문조사 기업의 미술품 구입액	21,421
매출액 대비 미술품 구입 비중	0.003623%
미술품 구입 경험 기업 비율	20.2%

○ 국세청 통계연보(2009)

[표 4-45] 흑자법인과 적자법인 구분

(단위 : 천 원)

구 분	흑자법인	적자법인
신고법인 수	270,075	135,967
매출액	2,198,536,266,000	470,804,698,000

- 미술품 구입 추정액 :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매출액에 설문조사에서 산출한 매출액 대비 미술품 구입 비중을 곱한 후, 설문조사에서 미술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을 곱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추정해 본 결과 19,534,080천원으로 추정됨

[표 4-46] 미술품 구입 추정액과 비중

(단위 : 천 원, %)

전체기업매출액(국세통계연보)	2,669,340,964,000
미술품 구입 경험기업 비율	20.2%
매출액 대비 미술품 구입 비중	0.003623%
미술품 구입 추정액	19,534,080

○ 세제 개선에 따른 미술품 구입 증가액 산출 : 설문조사 결과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을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기업에서는 미술품을 약 10% 가까이 더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비율을 미술품 구입 추정액에 대입하면, 세제 개선을 통하여 1,937,935천 원만큼 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술품 구입 추정액은 21,472,015천 원임

○ 세수 감소액 추정

• 가정

- 현행이자율은 5%로 계산
-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기업(약 20%)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 3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미술품의 내용연수는 설문조사를 기초로 6년
- 미상각대상 미술품을 포함하여 6년 후에는 처분이 일어남
- 세수감소 효과 계산 시 법인세율은 20%로 단일하게 적용
- 세법 개정에 따른 미술품 구입 추정액 전체가 모두 업무와 관련이 있음
- 3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회사가 구입 즉시 비용으로 계상함

• 300~1,000만 원 미술품을 구입 즉시 비용처리를 하여 손금에 산입하게 됨. 300~1,000만 원 미술품의 평균 보유 기간은 6년 정도이며, 이 중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기업은 약 20% 정도임. 따라서 조세 개정을 하게 되면 300~1,000만 원 미술품을 일시에 상각하게 되는 것이며, 현행법에 따라서는 20% 정도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기간 별로 손금화 시키고 나머지는 보유기간 이후 처분 또는 폐기처분을 통해 손금화 시키게 되는 것임

• 현행 세법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손금산입이 되므로, 조세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3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미술품 구입 금액에서 발생함. 조세 개정에 따른 미술품 구입 추정액은 21,472,015천 원이었으므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300~1,000만 원 구입 비율 26%를 적용하면 300~1,000만 원 구입 추정액은 5,676,265천 원이 됨

• 현행 세법에 따르면 약 20%정도는 매년 상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금액이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에서는 처분 또는 폐기시에 손금에 산입됨. 세법을 개정하면 300~1,000만 원 미술품 구입 금액 전체가 구입 즉시 손금에 산입됨.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 동안 매년도에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47]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 동안 매 년도에 손금산입되는 금액 비교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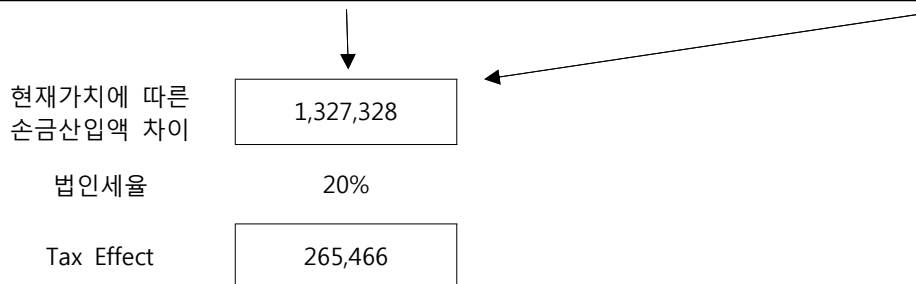
구 분	현 행 세 법			개정안
	감가상각	미상각	합 계	
1년도	189,209		189,209	5,676,265
2년도	189,209		189,209	
3년도	189,209		189,209	
4년도	189,209		189,209	
5년도	189,209		189,209	
6년도	189,208	4,541,012	4,541,012	
합 계	1,135,253	4,541,012	5,676,265	5,676,265

- ▶ 어떠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결국 손금에 산입되는 총금액은 동일하며 6년간 납부할 세액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세법보다 일찍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초기에 납부할 세금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게 되며, 이자율 차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차이가 발생함. 이자율 차이를 고려하여 세수감소효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4-48] 법인의 미술품 구입 시 손비 인정 범위를 1천만 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세수감소효과 분석

(단위 : 천 원)

구 분	금 액	매년 상각액	현재가치할인율	현재가치
상각대상 미술품	1,135,253	189,208.83	5.075692	960,366
미상각대상 미술품	4,541,012		0.746215	3,388,571
	5,676,265			4,348,937



- ▶ 6년간의 총 손금산입액은 동일하지만 이자율로 인한 현재가치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액은 1,327,328천 원만큼 더 많이 계상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은 약 265,466천 원이 적어지게 됨

바. 도입 효과

1) 정성적 효과

- 미술품은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많음. 그러나 기업의 환경·미화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도 널리 사용되면서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
- 기업이 미술품 구입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정량적으로는 이자효과만 기대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구입비용이 커서 망설이게 될 때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는 것으로 좀 더 미술품 구입의 기회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할 수 있음
- 따라서 미술품은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에서 기업의 업무용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2) 정량적 효과

- 기업이 구입하는 미술품 구입 추정액은 19,534백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에 대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경우 구입증가액은 1,938백만 원으로 산출됨. 또한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세수감소액이 발생하는 금액은 265백만 원임. 따라서 미술품 손금 산입 금액 조정으로 인한 정책적인 효과는 1,673백만 원으로 나타남

[표 4-49] 법인의 미술품 구입 시 손비 인정 범위를 1천만 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세수감소액과 정책 효과

(단위 : 백만 원)

미술품 구입 증가액	1,938
세수감소액	265
정책효과	1,673

- 조세 제도가 개선된 이후의 매출액과 미술품 구입 증가액, 세수감소액 등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4-50] 법인의 미술품 구입 시 손비 인정 범위를 1천만 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정책 효과(향후 3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업 총 매출액	3,390,828,147	3,600,246,151	3,809,664,154	4,019,082,158
미술품 구입 추정액	24,814	26,346	27,879	29,411
세제 도입 후 미술품구입 증가액(A)	2,462	2,614	2,766	2,918
세제 도입 후 미술품 구입액	27,276	28,960	30,645	32,329
조세감면 전·후 손비산입 현재가치 차액(B)	1,686	1,791	1,895	1,999
세수감소액 (C=B*세율)	337	358	379	400
정책효과 (A-C)	2,124	2,256	2,387	2,519

- * 전체기업 매출액은 국세청 통계연보 상 최근 5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법인세율은 20%, 이자율은 5% 적용

[표 4-51] 법인의 미술품 구입 시 손비 인정 범위를 1천만 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효과 추이

(단위 : 백만 원)

해당연도	미술품 구입 증가액	세수감소액	정책 효과
2014	2,614	358	2,256
2015	2,766	379	2,387
2016	2,918	400	2,519

[표 4-52] 법인의 미술품 구입 시 손비 인정 범위를 1천만 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분야별 효과 추이

(단위 : 백만 원, 명)

해당연도	미술품 구입 증가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2014	2,614	4,810	2,196	29.77	42.06
2015	2,766	5,089	2,323	31.50	44.50
2016	2,918	5,369	2,451	33.24	46.95

-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손금 범위를 확대할 때, 미술품 구입의 증가액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를 각각의 계수로 구함

사. 제도의 한계

- 기업이 지출하여 취득하는 물품이 소액인 경우 바로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만큼 일정 기간에 나누어서 비용처리를 하게 되어 있음
- 미술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소액(300만 원 → 1,000만 원)이하라면 바로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상이라면 자산으로 분류한 후, 향후 가치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 나누어서 손금처리를 해야 하고,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는 것임
- 현행 세법이 '미술작품을 장식·환경미화의 목적으로 공용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손비 인정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이 조항에 대하여 미술계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도 여전히 오해할 소지가 있음
- 기업이 고유 업무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모두 비업무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미술품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비업무용자산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해 예외를 두는 것은 명분이 없음
- 향후 언젠가 미술품을 처분하게 되면 미술품을 취득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던 자산으로 처리하던 법인세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한 것이며 단지 법인세를 언제 납부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임
- 손비인정의 의미
 - 비용: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를 말함. 즉, 기업 외부로 현금이 유출되는 거래가 수반될때 인식됨
 - 자산: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

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따라서 재화 및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어 미래의 현금유입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바로 비용처리하여야 함
-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거나, 규제대상인 접대비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였더라도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면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동일해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 기업이 구입한 업무용 미술품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입 즉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금액을 초과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모두 법인이 결국 부담하는 세금은 동일한 것임을 인지해야 함(단, 이자율에 따라 현재가치차액 고려)

8.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도입

가. 도입 배경

○ 산업적 측면

- 21세기 창조경영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발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술의 창조성을 기업 경영에 접목하기 위한 예술교육에 대한 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전세계 IT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적 기업혁신에는 문화예술이 필수요소가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창의경영을 정책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고용효과 측면

-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어느 산업 분야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므로(10억 원 당 문화산업 고용유발계수 12.0명),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이 활성화되면 예술소비가 증가해 문화예술 분야 고용창출로 연결됨
- 문화예술 분야는 20~30대 종사자가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예술계 전공자들의 낮은 취업률이 전체 청년실업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업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가 문제해결의 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예술계 대학 졸업생 취업률 : 44.1%(2012 교육부 자료)

○ 기업 내부효과 측면

-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문화경영이 종업원들의 조직몰입도, 조직 만족도, 업무효율성 등의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2009, 기업 문화경영 효과 연구, 한국메세나협회, 숙명여대 김소영 교수 연구결과)
- 예술교육을 통해 직원들 간 협동심을 고취하고 애사심을 높이며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큰 효과
- '2012 중소벤처 문화경영 활성화 사업 효과분석'(2012,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기업경영에 문화경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 및 근로의욕, 근무태도, 업무능률 등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는 등 조직문화에도 성과가 크다고 함

나. 도입 목적

- 창의성 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업의 교육훈련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술을 활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또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수익을 창출하게 되어 예술계의 자생력을 높

이는 효과도 있음

- 문화예술은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창의성 증진을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임

다. 현황 자료 및 사례

- 가장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으며 조건에 따라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하여 6%~30%(중소기업에 보다 높은 비율 적용)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임
- 연구·인력 개발비는 크게 연구개발과 인력개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교육훈련비는 인력개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음
 - 인력개발비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에 나열이 되고 있으며, 위탁훈련비,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이 있음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품질관리·생산관리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의 경우 이 조항에 포함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 (2013.02.15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생략>
2. 인력개발	<p>가. 위탁훈련비</p> <p>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p> <p>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p> <p>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p> <p>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p> <p>5) 그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p>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p>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p>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p> <p>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라. 세제 개선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함

현행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p>⑪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중략)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4.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6. < 신 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p>⑪ 동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마. 조사 방법

○ 선행연구인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 훈련비 세액공제제도 도입 방안 연구’(2009. 01.), ‘문화예술 기부금세액공제제도 도입방안 2차 연구’(2011. 3)의 내용을 요약함

1) 설문 조사

- 문화예술활동 관련 교육훈련비 세제공제제도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을 80:20으로 유지하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전화조사 및 Fax조사, 95% 신뢰수준 ± 4.38

[표 4-53] 문화예술 관련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 및 세수감소액 추정 과정

구 분	추 정 과 정
1 단계	설문조사 대상 총 500개 기업의 교육훈련비 총 지출액과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를 정리하였음.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성향이 다르므로 이를 각각 구분하였음
2 단계	수입금액(매출액)을 세분화하여 기업의 규모별로 교육훈련비 중 문화예술 활용 비율을 산출함
3 단계	수입금액 기준별로 매출액 대비 문화예술 활용 교육비 지출 비율을 산출함
4 단계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입금액 기준별로 향후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비 지출 예상액을 정리하여 현재보다 얼마나 증가하는지 비율을 산출함
5 단계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지출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20%, 일반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할 경우 지출액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증가율을 산출함
6 단계	2010 국세통계연보 상 수입금액 기준별 매출액에 [2단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곱하여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지출액을 추정함
7 단계	[6단계]에서 추정한 금액에 [4단계]에서 산출한 향후 증가율을 곱하여 세제도입 전 문화예술 활용 교육비를 추정하였으며, 이 금액에 다시 [5단계]에서 산출한 세제 도입 후 증가율을 곱하여 세제 도입에 따른 문화예술 활용 교육훈련비 증가액을 계산함
8 단계	전체 법인 중 법인세 납부 법인 비율(2010 국세통계연보)을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음
9 단계	[7단계]에서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8단계]의 비율을 감안하여 세수감소액을 산출함

- 설문대상 500개 기업 중, 일반기업의 경우 100개 중 98개(98%) 기업이 교육훈련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평균교육비는 약 12억 원 정도. 중소기업의 경우 400개 중 359개(90%) 기업이 교육비를 지출하고 평균교육비는 약 1천 3백만 원 정도.
 - 문화예술 활용한 교육훈련비를 지출한 기업은 일반기업이 11개(11%), 중소기업이 22개(5.5%)로 매우 적음
- 매출액 대비 문화예술 활용 교육비 지출 비용 : 설문기업의 매출액 대비 문화예술 활용 교육훈련비의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국세통계연보의 매출액에 대입하여 구함
- 향후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비 지출 예상액과 증가액 : 기업의 수입금액별로 편차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비 지출 예상액 : 수입금액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약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국세통계연보와 설문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지출액은 약 810억 원 정도로 추산됨. 향후 증가예상율과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증가율을 반영하면 약 2,27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액공제 제도 도입에 따른 증가액은 약 901억 원 정도가 될 것임

[표 4-54]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도입 따른 문화예술 활용 교육훈련비 추정액 및 효과

(단위 : 만 원)

구 분	수입금액 구분	문화예술 활용 교육비 추정액	향후 예상 증가율	세제 도입 전 문화예술 활용 교육비 추정액	세제 도입후 증가율	세제 도입 후 문화예술 활용 교육비 추정액	세제도입에 따른 교육비 증가액
법 인	10억 이하	3,685,960	14.05%	4,203,822	60.51%	6,747,439	2,543,617
	100억 이하	981,082	65.48%	1,623,457	69.42%	2,750,532	1,127,076
	500억 이하	573,680	62.06%	929,717	93.13%	1,795,561	865,843
	1000억 이하	747,727	18.00%	882,318	29.66%	1,144,023	261,705
	5000억 이하	500,367	82.19%	911,607	17.38%	1,070,057	158,450
	5000억 초과	435,521	-46.26%	234,034	95.44%	457,400	223,366
개 인		1,181,925	319.05%	4,952,829	77.27%	8,780,016	3,827,186
합 계		8,106,262	5.04%	13,737,784	50.64%	22,745,027	9,007,243

* 중소기업 : 개인, 수입금액 1,000억 원 이하

* 일반기업 : 수입금액 1,000억 원 초과

○ 세수감소액 추정

- 전체 법인 중 법인세 납부 법인의 비율 :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교육훈련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만,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세수감소액도 발생하므로 고려하여야 함. 일반기업의 법인세 납부법인 비율은 35.70%, 중소기업은 53.33%(2010년 국세통계연보)
- 약 251억 원의 세수감소 예상
- 세제 도입에 따른 교육훈련비 증가액이 약 901억 원이므로, 실제 효과는 약 650억 원

바. 도입효과

1) 정성적 효과

- 문화예술은 창의성 증진을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키워드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업에서 교육훈련활동은 단순히 직무교육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사고를 위한 활동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를 위한 창의와 혁신 기반의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2) 정량적 효과

- 전제 :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20%, 대기업 10%
 - 교육대상기관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④「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⑤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기관에서 인증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예술법인 및 단체

[표 4-55]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제도의 정책적 효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합계
세제도입후 문화예술 활용 교육비 추정액 (A)	15,274	212,176	227,450
법인세 납부법인 비율 (B)	35.70%	57.83%	
교육훈련비 세액공제율 (C)	10%	20%	
세수감소액 추정액 (D)=(A)×(B)×(C)	545	24,541	25,086
세제도입에 따른 교육훈련비 증가액 (E)	3,818	86,254	90,072
세제의 정책적 효과 (F)=(E)-(D)	3,273	61,713	64,986

- * 예술단체의 매출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액은 반영하지 않았음
- * 총 500개 기업(중소기업 400개 업체, 일반기업 100개 업체) 대상 조사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각각 80%, 20% 비율로 유의 할당. 95% 신뢰수준 ±4.38
- * 2010년 국세통계연보(2009년 신고 기준)에 의하면 전체 법인 중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의 비율(B)을 활용

[표 4-56]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효과 추이

(단위 : 백만 원)

해당연도	문화예술 활용 교육비 증가액	세수감소액	정책 효과
2014	113,986	32,254	81,733
2015	120,761	34,171	86,590
2016	127,536	36,089	91,447

-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2016년까지의 법인매출을 추정하여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문화예술교육 훈련비의 증가액을 산출, 세수감소액과 그에 따른 정책 효과를 계산함

[표 4-57]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 추이

(단위 : 백만 원, 명)

해당연도	교육비 증가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2014	113,986	209,734	95,748	1,298.30	1,834.03
2015	120,761	222,200	101,439	1,375.47	1,943.04
2016	127,536	234,666	107,130	1,452.64	2,052.05

-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가 증가함에 따른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를 각각의 계수로 산출함

사. 제도의 한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한정하지 않고 지자체 출연 문화재단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예술교육의 경우 지역별로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가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역 문화재단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참 고 문 헌

보고서

김상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POSCO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주)포스코경영연구소, 1998
김의준, 김갑성,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김정숙, 안영규,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발전전략」, 문화산업연구, 2009
이종규, “2011 시장전망” 「2010년 공연결산 및 시장전망」, 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이강욱,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정상철, 「콘텐츠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허은영, 「예술분야 일자리 특징 및 인력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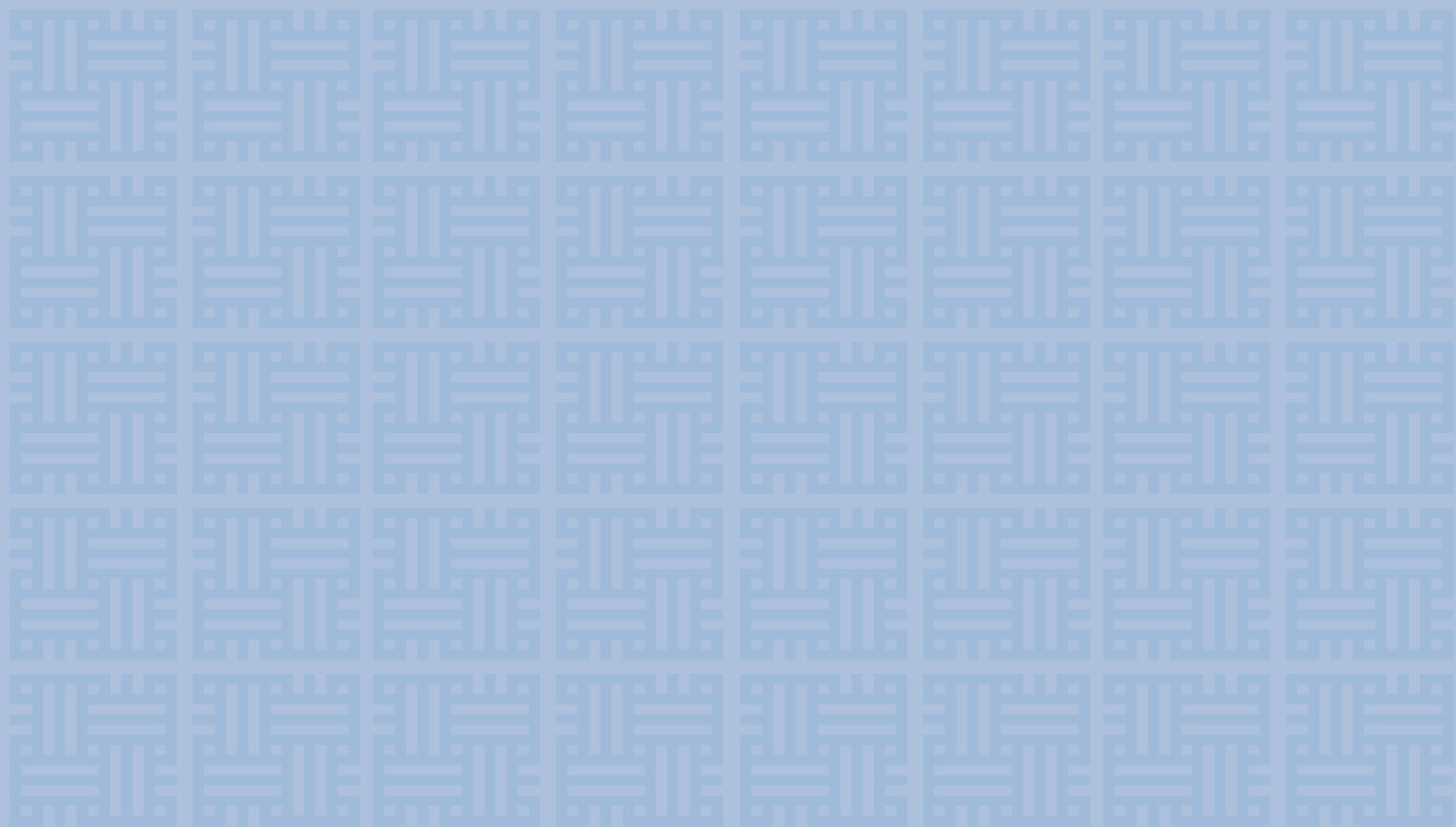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특구 및 창의원 조성방안 연구」, 2010
문화체육관광부, 「기업의 미술품 구입 활성화 방안」, 20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2013년 업무계획, 2013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실태조사」, 2007~2012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10~2012
중소기업중앙회, 「2012 중소벤처 문화경영 활성화 사업 효과분석」, 2012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2010~2012
한국교육개발원, 「전년도 대비 '12년 주요 취업통계 비교」
한국메세나협회, 「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 세액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8
한국메세나협회, 「기부금세액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9
한국메세나협회, 「기업 문화경영 효과 연구」, 2009
한국메세나협회, 「기부금세액공제제도 도입방안 2차 연구」, 2011
한국메세나협회, 「메세나법 도입의 타당성 연구」,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CTI 가치와 전망」 제11호(2012-11), 2012.12.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소비지출의 소득공제 도입 연구」, 200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007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각 연도

웹페이지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http://kosis.kr/>
- 인구총조사(2010),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 장래가구추계(2010),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2010-2012),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국세통계연보(2012), 국세청 <http://www.nts.go.kr/>

2009년도 한국의 개인기부지수, 기빙코리아 2010,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0년도 한국의 기업기부지수, 기빙코리아 2011,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1년도 한국의 개인기부지수, 기빙코리아 2012,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http://www.beautifulfund.org/>
<http://bfcop.tistory.com/>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BN : 978-89-7820-578-8 93300